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연구책임자: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윤지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빙강의교수)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통일 이후 통합방안(5/5년차)

KINU 연구총서 1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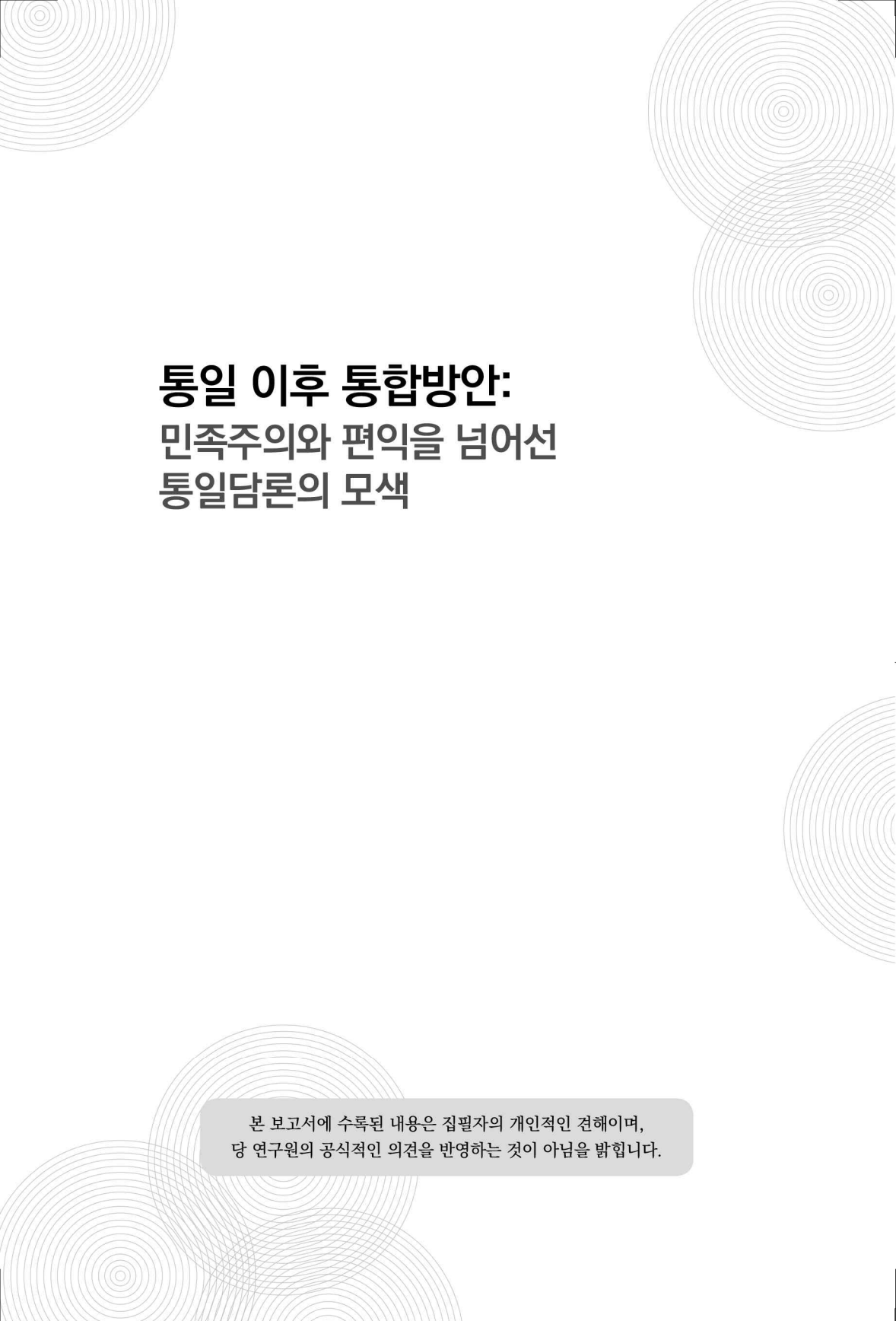
---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저자	이상신, 박종철, 윤광일, 윤지성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두일디자인(02-2285-0936)
I S B N	978-89-8479-891-5 93340 남북 통일 문제[南北統一問題]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7034013
가격	8,500원

---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요 약 .....	11
<b>I. 서론   이상신 .....</b>	<b>19</b>
1. 새로운 통일담론의 모색 .....	21
2. 연구조사방법 .....	26
<b>II. 통일인식의 변화 I : 민족주의 통일담론의 쇠퇴   이상신 .....</b>	<b>27</b>
1. 우리에게 통일은 필요한가? .....	29
2.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쇠퇴 .....	46
3. 통일의식과 북한인식의 상관관계 .....	54
4. 소결 .....	70
<b>III. 통일인식의 변화 II: 통일편익론의 등장과 한계   윤지성 .....</b>	<b>73</b>
1. 통일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76
2. 통일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81
3.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85
4. 통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90
5. 심층분석 .....	94
6. 요약 및 결론: 통일편익론의 한계 .....	101
<b>IV. 통일인식의 변화 III: 가치 기반 통일담론의 가능성   윤광일 .....</b>	<b>103</b>
1. 국가정체성 .....	105
2. 사회적 거리감과 국가정체성 .....	127
3.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	137
4. 경험적 분석: 기본가치, 정치이데올로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택 .....	148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b>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박종철</b> .....	<b>167</b>
1. 통일경로와 통일국가정체성의 의미 .....	169
2.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의 기본방향 .....	172
3. 통일국가정체성의 지향점: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 새로운 가치의 모색 .....	174
<b>참고문헌</b> .....	<b>178</b>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b>189</b>

## 표 차례

표 II-1	통일 필요성 인식 -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
표 II-2	통일에 대한 생각	35
표 II-3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40
표 II-4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측에 더 이득이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42
표 II-5	세대별 통일 태도 비교	43
표 II-6	이념별 통일 태도 비교	44
표 II-7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6
표 II-8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8
표 II-9	통일원칙 -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9
표 II-10	통일국가와 민족주의	50
표 II-11	북한 이미지 평균값 비교	56
표 II-12	북한인식의 4군집	57
표 II-13	북한인식 군집의 조작적 정의	60
표 II-14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해야 하는 이유	62
표 II-15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64
표 II-16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의 이해득실 인식	65
표 III-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78
표 III-2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79
표 III-3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80



표 III-4	통일 후 남북한 각 측의 이득과 손해에 대한 생각	82
표 III-5	통일이 주는 국가, 자신, 남북한 주민의 이익에 대한 생각	83
표 III-6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85
표 III-7	통일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 및 비용부담 정도	88
표 III-8	통일 이후의 경제적 전망	89
표 III-9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의 변화양상에 대한 생각 (1)	91
표 III-10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의 변화양상에 대한 생각 (2)	93
표 III-11	통일의 편익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95
표 III-12	통일을 위한 세금 부담 정도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97
표 III-13	사회적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	99
표 IV-1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112
표 IV-2	연령별 국가정체성 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113
표 IV-3	국가정체성 요인분석: 요인적재 값(주성분분석 및 배리맥스 회전방법)	115
표 IV-4	국가정체성과 성격특성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18
표 IV-5	국가정체성과 통일국가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21
표 IV-6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25
표 IV-7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보가더스 척도	129
표 IV-8	보가더스 척도 각 항목 찬성 응답자 수	130
표 IV-9	국가정체성과 성격특성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36
표 IV-10	기본가치의 개념적 정의와 하위유형	140
표 IV-11	기본가치와 가치모사 진술문	149

## 표 차례

표 IV-12 Schwartz 기본 개인가치 분포 .....	150
표 IV-13 사회경제변수와 정치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성향, 기본가치 평균비교 .....	157
표 IV-14 대선 선택과 정당일체감별 정치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성향, 기본가치 분포 .....	161

# 그림 차례

그림 II-1	통일의식의 변화 (1998~2008) .....	30
그림 II-2	통일의식의 변화 (2007~2016) .....	32
그림 II-3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 - 지지정당별 .....	52
그림 II-4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 - 이념별 .....	53
그림 II-5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 - 세대별 .....	54
그림 II-6	북한 이미지 산포도 - 2016년 .....	58
그림 II-7	북한 이미지 산포도 - 2017년 .....	59
그림 II-8	북한 이미지 산포도 - 2016년 및 2017년 통합 .....	59
그림 II-9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 필요성 .....	61
그림 II-10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 .....	66
그림 II-11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	67
그림 II-12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	68
그림 II-13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인식 군집 .....	69
그림 IV-1	보가터스 척도와 이주자 집단 간 행렬도(biplot) .....	132
그림 IV-2	Schwartz의 동기에 따른 10개 기본가치와 4개의 상위차원 가치구조 .....	142
그림 IV-3	세대별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자기주도와 자극) 분포 .....	152
그림 IV-4	세대별 자기고양 가치(쾌락, 성취, 권력) 분포 .....	154
그림 IV-5	세대별 보수주의 가치(안전, 동조, 전통) 분포 .....	155
그림 IV-6	세대별 자기초월 가치(박애와 보편주의) 분포 .....	156



## 요 약

남한과 북한은 왜 통일을 해야 할까?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 연구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까지의 통일담론이 그 한계에 달했으며, 새로운 통일담론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고민에서 시작한다. 지금까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되어 온 것은 민족주의의 가치였다. 즉,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나누어진 민족 공동체를 하나의 국민국가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은 그 설득력과 호소력을 잃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는 것은 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통일담론 외에도 통일을 통한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는 논리가 있었으나 이 또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와 통일 편익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은 단순히 민족의 결합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통일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의 자율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고, 통일 공동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새롭고 진취적인 가치관의 성립을 돕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일담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면서, 민족주의와 통일 편익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통일의 가치와 규범을 탐색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통일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 이후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 요 약

2016년 진행한 바 있다. 2017년에도 유사한 내용과 구조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 대북·통일정책 평가
-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인식
- 정치사회적 인식

통일의식의 변화, 그리고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약화라는 주제로 서술된 2장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연구원 및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통일의식, 즉 통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과 태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둘째, 이렇게 통일의식이 약화되는 이유는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에서 통일을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는 풍조가 저변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의식 약화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동안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되어오던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통일의식과 북한인식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

## 요 약

인 상식과는 달리, 보수적인 현실주의적 군집에서 통일의식이 약한 반면, 오히려 통일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자유주의적 군집에서 통일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그러나 이는 군집들 간의 비교이며, 전체적으로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소구력이 약화된다는 경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다섯째, 최근 북핵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현실주의적 군집이 강화되는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주의적 군집과 통일의식의 약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군집이 커진다는 것은 곧 전체적인 통일의식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수록 통일의식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는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은 어떠한가? III장의 분석결과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은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에 비해서, 그리고 전쟁위험 제거론에 비해서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에도 통일편익론은 비중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다. 또, 오히려 통일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도 경제적 이득으로 인한 것을 꼽는 국민들이 감소했으며,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드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는 점은 통일대박론과 같은 통일편익론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안보 위협을 통해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통일 편익이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되며 북한에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통일편익론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

## 요 약

로 알 수 있다.

IV장에서는 ‘국가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중심 질문은 대한민국의 한 개인을 다른 나라 국민과 구분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과 공유하고 있는 자기 개념의 속성으로서 사회정체성 곧,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화와 지역통합 그리고 이주와 다문화주의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정체성은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가?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새로운 정치공동체에서 ‘나’가 아닌 ‘우리’로 만드는 바탕이 될 국가정체성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IV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우선 시민정체성은 예상대로 민족과 공동체 중심의 통일국가상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반면, 인종정체성은 이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력도 시민정체성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민정체성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통일국가가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한다’,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이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추는 반면에 인종정체성은 이에 대한 동의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민정체성은 소수집단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동의하거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까지 허용하는 제한 없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동의로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않으며 북한제도와 북한교과서를 수용하는 관용 태도까지도 동의하게 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정체성이 집회나 선전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통일국가상에 대한 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종정체성은 이를



## 요 약

지지하게 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민정체성이 소수집단, 북한제도, 북한교과 모델 분석 결과에서처럼 통일국가정체성의 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추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담론은 민족주의와 통일편익론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까?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다층성, 복합성, 역동성, 포용성과 개방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국가정체성은 다층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통일국가정체성은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 동북아 지역,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시민정체성, 동북아지역 정체성, 보편적 가치의 세계적 정체성이 층층이 존재하는 다층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중정체성에 중첩되는 연결고리와 안전판을 만들어서 다중정체성이 상충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정체성은 복합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사회의 자율성과 국가의 역할, 공동체의 대외관계, 공동체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이 결합되는 복합성을 띠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정체성은 역동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통일준비단계, 통일협상단계, 통일 이후 통합단계를 거치면서 골격을 갖추고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전환되며 변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더욱이 통일국가정체성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국내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위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역동성과 동태성을 지닐 것이다.

## 요 약

넷째, 통일국가정체성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계층,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통일국가정체성은 분단 기간의 분열과 대립,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국가정체성은 대내적 통합을 지향하면서도 대외적 개방성을 함유해야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주제어:** 통일국가정체성, 민족주의적 통일담론, 통일편익론, 가치 중심의 통일담론, 북한인식 군집, 통일 이후 통합과정

## Abstract

### **Beyond Nationalism and Economic Benefits: Searching for New Discourse for Unification**

*Lee, Sang-Shin et al.*

As the military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tensifies, many surveys have found that South Koreans are not as enthusiastic about the national unification as they did back in 1990s. Only about a half of South Koreans still believe that the Korean Unification is necessary. Majority of them also states that if there is a way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unification might not be necessary. For Koreans, unification is now an option for their future, not an ethical quest that all Koreans must pursue no matter what the cost. Nationalism used to be a driving force for the unification. But now the nationalistic discourse that South and North should rebuild the national community for only Koreans is losing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ublic. Other attempt to justify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such as so called ‘unification as bonanza’ theory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s also been largely ineffective. This study aims to find a new justification for the Korean national unification, focusing upon what kind of values and norms should be built for our future unified Korea.

## Abstract

**Keywords:** National Identity of Unified Korea, Nationalistic Unification Discourse, Benefits of Unification, Unification based on General Values, Clusters o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Integration Process after Unification

# I. 서론

이상신(통일연구원)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 1. 새로운 통일담론의 모색

남한과 북한은 왜 통일을 해야 할까?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 연구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까지의 통일담론이 그 한계에 달했으며, 새로운 통일담론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고민에서 시작한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 한반도의 비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근간의 여러 연구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구태여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더 이상 특이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통일 공감대 하락이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그 대안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김영삼 대통령의 1994년 광복절 연설문에서 찾을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과 민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습니다.  
민족의 정기는 되살아나고 있으며, 우리는 민족 진운의 역사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맞추어,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시아·태평양 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헤어져 살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원기를 한군데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

족 시대를 열어나 가야 합니다.”

1994년 이후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지금까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되어 온 것은 민족주의의 가치였다. 즉,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나누어진 민족공동체를 하나의 국민국가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은 그 설득력과 호소력을 잃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는 것은 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그리고 북핵 개발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과연 통일이 가능할지,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통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적 목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하던 1990년대의 한국과 2017년의 한국은 매우 다른 성격의 사회다. 급격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현재의 한국은 폐쇄주의적이었던 1990년대의 한국과 매우 달라졌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만 2백만 명 이상이며, 여기에 3만 명 이상의 탈북주민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도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면, 혈통적·문화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담론이 언제까지 그 효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이 된 이후의 한국 사회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양한 혈통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고령화와 사회의 재생산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남한의 사정을 생각하면 적극적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는 그 근본적인 존속이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겪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단을 겪으며 이질적 성격이 강해진 남과 북의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미 함께 살고 있



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도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주의 바깥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통일담론 측면에서 보면 통일대박론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일대박론의 의의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통일담론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담론을 시도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 중심의 통일담론은 남북한 경제 격차로 인한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설득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들을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지리적으로는 대륙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4면이 바다와 군사 분계선으로 둘러싸인 폐쇄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은 이러한 폐쇄적이고 고립된 지리적·심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가능하게 하는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의 이점을 쉽게 편익분석을 통해 따지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박론의 가장 중요한 한계는 북한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통일 과정보다도 더 험난할지 모를 남북한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통일담론은 남한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포들까지도 함께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철저히 남한의 이익을 중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공동 주체이어야 할 북한 주민들이 소외된 채 통일의 피동적 대상 취급을 받고 있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북한의 실질적 핵무장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단계라고 평가되는 현재에 있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에 관련된 공약의 하나로, ‘통일 국민협약’을 맺어 북한 및 통일 문제에서 비롯된 남한 내부의 갈등, 즉, ‘남남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1994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는 왜 우리가 통일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와 통일 편익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은 단순히 민족의 결합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통일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의 자율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고, 통일 공동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새롭고 진취적인 가치관의 성립을 돕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일담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면서, 민족주의와 통일 편익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통일의 가치와 규범을 탐색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통일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 연구는 5개년 연구로, 통일연구원의 일반과제 ‘통일 이후 통합방안’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5개년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목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 1차년도(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 2차년도(2014):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분야별 지도층 형성방안』
- 3차년도(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 4차년도(2016): 『남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주민의식 비교』

이 연구과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한 종합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통일 이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무수한 과제 가운데서도, 통일 이후 북한체제 전환, 남북한의 분야별 제도통합, 남북한 주민의 국민통합 등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연구는 이런 대비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 각종 사회갈등과 균열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통합(integration)을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제도통합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제도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외형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치통합은 통합의 내적 측면으로 남북한 주민이 가치와 의식, 문화면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또한 통합은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국가통합은 국가형성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정치적·법적 절차의 마련, 국제법적 절차 및 국제적 지지 등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통합에 따른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가치관과 규범, 생활양식 등에서 절차와 규칙이 내재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합에 대해 개념을 정리한 후, 이전 연구들에선 통일 이후 각종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형성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제도통합과 내적 통합인 가치통합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울러 국가 통합과 사회통합 또한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다.

## 2. 연구조사방법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 이후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6년 진행한 바 있다.<sup>1)</sup> 2017년에도 유사한 내용과 구조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2017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방법을 통해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를 2017년 6월 12일~7월 1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접은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가정하였을 때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이다. 이 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의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 대북·통일정책 평가
-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인식
- 정치사회적 인식

---

<sup>1)</sup> 박종철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참조.

## II. 통일인식의 변화 I : 민족주의 통일담론의 쇠퇴

이상신(통일연구원)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 1. 우리에게 통일은 필요한가?

## 가. 통일의식의 약화

‘통일의식’이라는 용어가 여러 연구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연구와 사용된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sup>2)</sup> 사실 ‘의식’이라는 표현은 그 뜻이 모호하여 사회과학적 용어로는 이 맥락에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태도(attitudes)’ 혹은 ‘인식(perception)’ 등의 사회심리학적 용어를 쓰는 것이 좀 더 그 뜻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식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꽤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는 없으며, 이 연구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통일의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 중 통일의식이라는 용어를 정리해놓은 연구로 정은미의 논문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통일의식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통일의식은 남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한다. [...] 통일의식은 단일적·통합적·조화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갈등과 긴장을 내포할 수 있다. 통일의식은 현실에서는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통일국가의 이상이나 도덕적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내포할 수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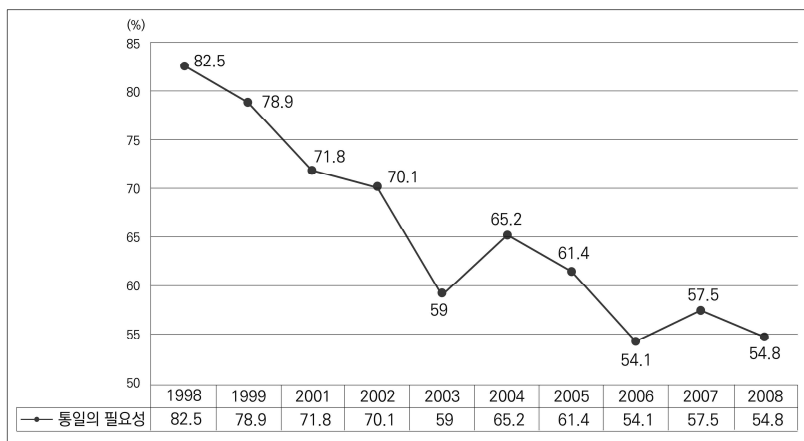
2) ‘통일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 몇몇 주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5호 (2016), pp. 131~161; 백대현·이재완,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 (2015), pp. 205~224;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권 1호 (2012), pp. 101~139; 배한동, “한국 대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권 2호 (2000), pp. 303~349.

3)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5권 2호 (2013), p. 135.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통일의식은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하는 정치 태도 및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의식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통일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최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는 중앙일보 여론조사(1998~200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2007~2016),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통일 필요성의 하락을 점검할 것이다.

그림 II-1 통일의식의 변화 (1998~2008)



출처: 중앙일보 여론조사(1998~2008).

우선 <그림 II-1>의 그래프는 1998년부터 중앙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귀하께서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혹은 “가급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문항들을 더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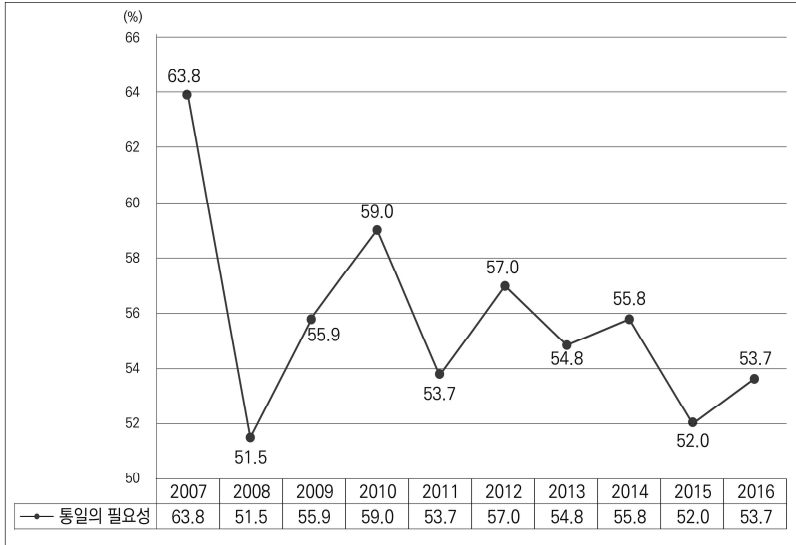


를 그렸다. 1998년에 82.5%의 응답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2008년에 와서는 그 비율이 54.8%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98년과 비교하면 27.7%p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즉, 200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도 위에서 인용한 중앙일보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빠짐없이 공통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일의식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그림 II-2〉의 그래프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혹은 “약간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을 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지만, 중앙일보 조사와 서울대학교 통일의식조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년 동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꾸준히 하락해왔으며, 현재는 50% 정도 수준인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림 II-2 통일인식의 변화 (2007~2016)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인식조사(2007~2016).

중앙일보 조사와 서울대학교 통일인식조사는 모두 5점 척도로 통일 필요성에 대해 묻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 설문문의 중간값이 “현재대로가 좋다”인 반면, 서울대 통일인식조사는 “반반/그저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서 설문 구성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 센터의 서베이는 위의 두 조사와 달리, 통일 필요성 문항을 4점 척도(1=매우 필요하다; 2=다소 필요하다; 3=별로 필요하지 않다; 4=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측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ی 측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2003년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8.3%, 2006년에는 72.9%, 2007년에는 73.7%, 2008년에는 71.9%, 2009년에는 70.7%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보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으로 오면서 하락하는 경향성은 동일하나, 2009년까지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위에서 인용한 중앙일보와 서울대학교 자료

와 차이나는 점이다.

그러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윤리적 성격이 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내심으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낯선 조사원에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답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통일을 설정해왔으며, 그 당위성에 대해 각급 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의견을 타인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응답자들에게 좀 더 솔직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는 중간값 척도<sup>4)</sup>가 필요하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솔직하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응답자들에게도 적절한 선택지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여기서 비교한 세 가지 조사 중 가장 정확한 워딩과 설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통일의식조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척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학교의 조사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일 필요성 인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일보 조사 및 서울대학교 조사와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앞의 조사와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보았다.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한 문항이 측정되었는데, <표 II-1>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통일 필요성 인식 문항에서 통일을 긍정하는 문항은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와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였는데, 이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들을 합한 비율은 2016년에 73.2%였다. 그

<sup>4)</sup>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현재대호가 좋다”, 서울대 조사에서는 “반반/그저 그렇다.”

러나 2017년 같은 항목을 측정하였을 때 통일 필요성을 긍정적인 비율은 64.8%로 8.4%p 하락을 보였다. 반면 통일 필요성을 부정한 비율(“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은 2016년에 18.8%에서 2017년의 26.9%로 8.1%p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통일 필요성 인식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1 통일 필요성 인식 -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6	2017	2년 합계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15.0	17.3	16.1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58.2	47.5	52.9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16.6	22.0	19.3
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된다	2.2	4.9	3.5
통일에 관심이 없다	8.0	8.4	8.2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또한, <표 II-1>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16년 8.0%, 2017년 8.4%로 조사된 것이다. 이는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 무관심한 고립주의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존 연구와 같은 결론이라고 보인다.<sup>5)</sup> 통일이 필요 없다는 것과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매우 결이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이 통일 무관심층의 성장은 앞으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문항

<sup>5)</sup> 박종철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pp. 135~150.

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중 통일의 필요성과 관계된 문항들을 아래 <표 II-2>에 정리하였다.

표 II-2 통일에 대한 생각

(%)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8	4.6	4.4	4.5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8.8	21.0	23.3	19.1
①+②	39.6	25.6	27.6	23.6
③ 보통이다	36.3	26.7	31.7	35.3
④ 대체로 동의한다	20.4	36.4	34.3	33.6
⑤ 매우 동의한다	3.7	11.4	6.3	7.5
④+⑤	24.1	47.8	40.6	4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7).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지문은 통일을 필요성이나 편익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의 측면으로 상정한 질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통일과 개인적 가치로서의 통일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문항이 삽입된 이유는 응답자 개인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물어 좀 더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개인적 가치로서의 통일 문항에서, 통일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합계

24.1%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세대 간 격차가 상당히 큰데,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답한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각각 13.7%와 18.2%에 그쳤다. 40대에서도 이 비율은 22.6%로 크지 않았으나, 50대와 60대에서는 32.2%와 30.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다음 질문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문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운 47.8%였던 데 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5.6%에 그쳤다. 이 질문은 통일과 평화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즉,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전쟁 위협이 없더라도 분단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일이 평화 유지에 선행하는 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 가치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항의 의의는, 만약 통일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통일을 원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점에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할 때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좀 더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 부정적인 답변이 25.6%에 그쳤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통일의 편익은 크게 남북한 전쟁 위협의 해소, 통일로 인한 경제적 발전 및 성장, 민족공동체의 회복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 편익 중 전쟁 위협의 해소가 통일 이외의 방식으로 성취 가능하다면, 나머지 통일 편익들은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47.8%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도 세대별 차이가 컸다. 20대에서 동의한다는 비

율이 62.3%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52.8%였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서는 각각 47.6%, 42.2%, 그리고 38.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sup>6)</sup> 그리고 60대 이상 노령층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0%로, 동의한다는 비율보다 약간 적었다. 즉, 이 설문결과는 평화롭게 분단 상황이 관리될 수 있다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에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그 자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지상명령일 수 없으며, 평화, 경제적 안정, 질서, 인권, 민주주의 등 기타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목표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 및 시의성과 관련한 세 번째 문항은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27.6%였던 반면, 동의하는 비율은 40.6%로 훨씬 높았다.

다른 문항에 비해 이 문항은 전제 조건이 별로 붙지 않은 상대적으로 직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크지 않다. 물론 “이 시점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응답자에 따라서는 미래에 다시 통일이 당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40%가 넘는 응답자들이 최소한 현 시점에서 통일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당면 목표가 아니라고 답했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세대별 응답의 분포 또한 앞 두 문항의 그것과 유사하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이 당면 목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고, 노령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다.<sup>7)</sup> 하지만 앞 문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경우조차 통일이 현재의

<sup>6)</sup> 피어슨 상관계수는 -0.155이며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sup>7)</sup> 동의: 20대 44.0%, 30대 43.8%, 40대 42.8%, 50대 40.7%, 60대 34.0%; 동의 안함: 20대 24.0%, 30대 27.8%, 40대 26.9%, 50대 28.6%, 60대 27.6.0%.

당면 과제라고 답한 비율은 29.9%에 그친 반면, 당면 과제가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34.0%로 오히려 더 높은 편이었다. 즉, 통일이 다른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가치들에 우선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은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표 II-2〉의 마지막 문항,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라는 항목은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다. 즉, 이 문항은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즉,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답변의 비율은 23.6%였다. 반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민족주의일 필요는 없다는 답변의 비율은 41.1%였다. 이러한 분포는 이 연구의 근본적 질문인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보다, 민족주의가 통일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 문항은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필요성 문항에서도 세대별 격차가 존재했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9.7%의 20대가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한 반면 같은 연령층에서 긍정의 비율은 15.4%였다. 20대에서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34.3%p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 30대에서 그 격차는 20.0%p, 40대는 21.2%p, 50대는 14.6%p였고, 60대 이상에서는 3.3%p로 가장 낮았다. 비록 노장년층에서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를 회구하는 응답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설문조사 통계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첫째, 90년대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앙일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통일연구원의 서베이 결과들이 모두 같은 수치를 보여준다. 비록 사용된 척도와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경향성에 있어서는 모든 조사가 일치하고 있다.

둘째, 통일을 다른 공동체적 가치, 즉 정치적 안정과 평화, 경제발전, 인권,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평화가 유지된다면 분단된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 시점의 남한에 있어서 통일이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에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셋째, 단일민족공동체로서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은 그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거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통일의식 약화의 이유

앞 절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표 II-1〉 참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혹은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의 비율은 2016년 조사에서 각각 16.6%와 2.2% 이었다(합계 18.8%). 그리고 그 비율은 2017년 조사에서 각각 22.0%와 4.9%로 증가하였으며, 합계는 26.9%였다. 다시 말해 2017년 조사에서는 전 응답자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 없거나 혹은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게는 통

일 및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통일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며, 통일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가 그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둘째,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강한 민족주의적 통일관을 가졌던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에게 기존의 민족주의 통일담론은 큰 소구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을 대체할 새로운 통일담론의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전체적인 부정적 통일의식 확산의 또 하나의 중요 원인이다.

우선,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통일연구원의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sup>8)</sup> 한 위의 26.9%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 물었다. 이 새로운 문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3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빈도	%
통일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92	34.2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사회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74	27.5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63	23.4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생활과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28	10.4
한반도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12	4.5
합계	269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7).

<sup>8)</sup>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 <표 II-3> 참조.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통일 이후 남한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34.2%). 그리고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체제와 사회문화(27.5%), 그리고 통일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갈등(23.4%)이 부정적 인식의 중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제적 통일 비용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통일이 남북한 각각에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물었다(〈표 II-4〉). 그 결과, 2016년 조사에서는 46.0%, 2017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56.6%가 통일은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라고 대답했다. 즉,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통일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경제적 수익을 갖다 줄 것이며, 그 부담은 남한이 지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통일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6년에 42.9%가 통일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 반면, 2017년에는 이 비율이 32.9%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의 계속된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이 남한에 이득이라는 답변은 2017년을 기준으로 35.6%에 불과했다(남북한 모두 이익 32.9% + 남한 이익 북한 손해 2.7%). 즉,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만이 통일이 남한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분의 2는 통일이 남한에 손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역설했던 통일대박론이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결국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표 II-4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측에 더 이득이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	2017	합계 (%)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	46.0	56.6	51.3
남한에는 이득이지만 북한에는 손해다	3.9	2.7	3.3
남북 모두에 이득이다	42.9	32.9	37.9
남북 모두에 손해이다	7.3	7.8	7.5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7).

통일의식의 약화에는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세대별 통일의식을 비교하기 위해 <표 II-1>의 통일에 대한 태도 변수를 재코딩하였다. 즉, 통일에 대한 태도를 크게 통일 찬성, 통일 반대, 통일 무관심으로 나누었다. <표 II-5>는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혹은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답한 사람을 “통일 찬성”으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와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를 선택한 사람들을 “통일 반대”, 그리고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을 “통일 무관심”으로 다시 코딩하여 이를 세대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II-5>에서는 2016년과 2017년 데이터를 합하여 같은 틀 안에서 비교해 보았다.

표 II-5 세대별 통일 태도 비교

세대	통일 찬성	통일 반대	통일 무관심	합계
20대	53.0	33.6	13.4	100.0
30대	59.9	32.6	7.5	100.0
40대	74.2	19.1	6.7	100.0
50대	76.6	16.6	6.8	100.0
60대 이상	76.7	16.0	7.3	100.0
합계	69.0	22.8	8.2	100.0

(%)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 2017).

〈표 II-5〉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는 것은 통일에 대한 찬반에서 20대, 30대와 40대 이상 집단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40대 이상에서는 통일에 찬성하는 답변이 모두 70%를 훌쩍 넘었지만, 이 비율은 20대에선 53%, 30대에서는 59.9%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대신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비율은 모두 30% 이상이였으며, 특히 20대에서는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답변이 13.4%로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통일 찬성의 비율이 낮은 20대와 30대의 경우에도 통일 찬성의 비율은 모두 50%를 넘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0대의 경우는 그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표 II-5〉가 보여주는 것은 40대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가 명확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20대와 30대는 90년대 초부터 전쟁 직전까지 가는 대립과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제 협력 사이를 극단적으로 왕복하는 남북관계를 보고 자라온 세대들이다. 40대 이상의 세대들이 냉전 시기 상상한 통일은 언제 올지 모를 추상적 목표였다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통일은 매우 구

체적인 삶의 문제였다는 차이가 있다.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느끼는 체험이 다른 만큼, 통일의식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통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점점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통일 자체를 반대하거나 혹은 통일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다.

아래의 <표 II-6>에서는 통일에 대한 찬반 태도를 응답자의 이념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의 조사에서는 모두 11점 척도<sup>9)</sup> 응답자 개인들의 이념을 측정하였다. 이를 진보-중도-보수의 세 단계로 다시 코딩한 결과, 2016년 조사에서 진보:중도:보수의 비율은 23.5%:41.6%:34.9%였던 것이 2017년에는 30.1%:36.9%:32.9%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는 등의 정치적 격변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표 II-6 이념별 통일 태도 비교

(%)

이념	통일 찬성	통일 반대	통일 무관심	합계
진보	74.2	19.7	6.1	100.0
중도	65.6	24.4	10.0	100.0
보수	68.9	23.5	7.6	100.0
합계	69.0	22.8	8.2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 2017).

<sup>9)</sup> 0=매우 진보; 5=중도; 10=매우 보수.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찬반에 있어,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의 차이가 있을까? 위 표에 따르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중도나 보수보다 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도 이념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통일에 무관심할 확률이 높았다.

진보 응답자들의 통일 찬성 비율이 보수 응답자들보다 높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보수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적 특징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진보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민족주의보다는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보수적 응답자들이 통일을 더욱 선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오히려 진보 응답자들의 통일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들과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이념점수 평균을 T 검정 방법으로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이념의 차이는 통일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설명하는 좋은 지표가 되지 못했다.<sup>10)</sup>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우선, 한국의 진보는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운동을 주도해온 세력의 하나는 NL이며, 이들은 민족주의와 강력한 친화성을 갖는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진보가 통일에 대해 보수 이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둘째, 한국의 보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일문제에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sup>11)</sup> 현 단계에서 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이며 통일의 비용 또한 무척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 보수의 현실적 성향에

<sup>10)</sup>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24권 3호 (2014), pp. 185~213.

<sup>11)</sup>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절(통일의식과 북한인식의 상관관계)을 참조.

자극을 주어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쇠퇴

앞의 1절에서 현재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성, 그리고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세대별 차이가 그 통일의식 약화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표 11-7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년도	민족주의	이산가족 고통해소	전쟁위험 해소	북주민 복지	남한 선진국화
2007	50.6	8.9	19.2	1.8	18.7
2008	58.4	6.5	14.4	2.9	17.2
2009	44.0	8.5	23.4	4.2	18.5
2010	43.1	7.0	24.1	4.0	20.7
2011	41.7	7.2	27.2	4.8	17.7
2012	45.9	9.1	25.3	4.4	14.5
2013	40.3	8.3	30.8	5.5	14.2
2014	42.4	8.8	26.9	3.8	17.6
2015	41.9	11.5	25.7	6.2	14.1
2016	39.0	12.2	29.2	4.8	14.2
합계	44.7	8.8	24.6	4.2	16.7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07~2016), 기타 및 무응답 제외.

위 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sup>12)</sup> 여



기에서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2007년에 50.6%, 2008년에는 58.4%로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계속 조금씩 하락하여, 2016년 조사에서는 39.0%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것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욕구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07년의 19.2%에서 2016년에는 29.2%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울대의 조사가 시작된 2007년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였으며,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빠졌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위의 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파탄나면서 북한의 핵 무장이 현실화되는 시점의 여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는 따라서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면서 남북 간 전쟁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되었던 시기였다. 이런 점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전쟁 방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자료는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약화되는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2016년 및 2017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여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문항의 답지로는 민족주의(“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남북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전쟁위험 해소(“남북한 간의 전쟁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영향력 향상(“국제 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적 가치(“북한 주민의 인권

<sup>12)</sup> 1=같은 민족이니까; 2=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3=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 주기 위해; 4=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기타.

개선을 위해”) 등이 포함되었다. 아래의 <표 II-8>은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II-8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의 이유	2016	2017	합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28.8	34.8	31.6
남북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17.3	17.3	17.3
남북한 간의 전쟁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31.9	28.4	30.3
국제 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9.7	16.0	18.0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2.3	3.5	2.9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통일의 이유로 민족주의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6년 28.8%에서 2017년에는 34.8%로 약간 상승했다. 두 조사 결과를 합하여 계산하면 31.6%의 응답자가 통일 이유로 민족주의를 꼽았다. 비록 2017년에 민족주의의 비율이 약간 높아졌지만, 2016년에 39.0%에 그친 서울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낮은 것이다. 즉, 통일연구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성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서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통일 이후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도 제시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민족주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통일 한반도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비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통일원칙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조사해 보았다. <표

II-9)에는 여러 통일 원칙에 대한 응답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비교되어 있다.

표 II-9 통일원칙 -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원칙	2016	2017	16, 17년 통합
단일 민족 국가 복원	22.8	21.2	22.0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33.1	24.4	28.8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	13.5	14.4	14.0
남북한 주민의 복지와 인권의 증진	11.5	11.6	11.6
평화와 공존의 가치	18.9	28.3	23.6
기타	0.1	0.2	0.2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통일국가 비전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다른 가치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았다. 2016년 조사에서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힌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33.1%)였다. 2017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민족주의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가치”(28.3%)였다. 두 해 조사에서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힌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평화와 공존의 가치, 단일민족국가 복원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및 평화와 공존이 중요한 통일의 원칙으로 꼽힌 것은 현재 남한의 정치적 체제와 경제적 번영, 국제적 위상 등이 통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바램을 담은 것이라고 보인다. 반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한국의 민주화 이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국가 복원이 통일원칙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족주의의 영향력 쇠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통일 원칙 중 하나로 민족주의를 제시한 것은 다른 원칙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다른 원칙들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민족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통일원칙이 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아래 문항들을 통해 혈연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국가 원칙을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하였다.

표 II-10 통일국가와 민족주의

(%)

조사년도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2016	2017	2016	2017
① 매우 그렇다	6.5	5.0	24.8	12.8
② 대체로 그렇다	29.2	28.8	49.7	47.9
①+②	35.6	33.8	74.4	60.7
③ 별로 그렇지 않다	46.5	54.1	22.5	36.8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7.8	12.1	3.1	2.5
③+④	64.3	66.2	25.6	39.3
모름/무응답	0.1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우선 혈연적 민족주의를 측정한 문항은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였다. 단일민족국가 항목은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찬반 응답을 통해 측정했다. 이 문항들은 각각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우선 혈연적 민족주의를 보면, 혈연적 민족주의를 긍정한 비율은 2016년에 35.6%였으며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한 33.8%였다. 통일국가에서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인데, 이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성을 많은 국민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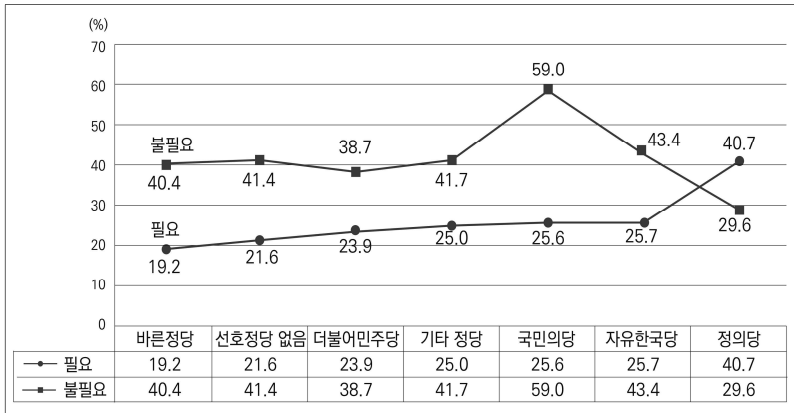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를 물었을 때는 2016년에는 74.4%, 2017년에는 60.7%가 긍정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단일민족국가와 혈연적 민족주의는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문항의 구성을 달리함에 따라 혈연적 민족주의는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1만이 긍정한 반면, 단일민족국가 원칙에는 2016년에 거의 4분의 3 가까운 응답자들이 긍정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 문항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한국 비전의 구체성과 추상성의 차이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혈연적 민족주의 항목에서는 통일한국에서의 정체성 문제를 이민과 외국인과의 결혼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단일민족국가는 상당히 추상도가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강조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 받은 응답자들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추상적 표현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같은 구체적 사례가 제시된 경우, 응답자들은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차원의 답을 내놓았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은 각각 다른 집단에게 어떻게 받

아들여지고 있을까? 아래의 <그림 II-3>, <그림 II-4>, <그림 II-5>는 각각 지지정당, 이념, 세대별로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에 대한 반응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은 <표 II-2>에 소개한 문항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를 재코딩해서 만든 것이다. 원래 5점 척도로 측정된 이 문항을 “민족주의 통일 필요”, “민족주의 통일 불필요” 그리고 “보통”의 3점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여기에 소개된 그래프에는 명확한 비교를 위해 “필요”와 “불필요” 응답만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II-3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 - 지지정당별



<그림 II-3>에서는 응답자들의 선호정당에 따라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을 비교하였다.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높이 긍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내정당 중 가장 진보적인 정의당 지지자들이었다 (40.7%). 정의당 이외에는 더불어민주당(23.9%), 국민의당(25.6%), 자유한국당(25.7%)이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무당파나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통일 필요성의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정당 지지는 소수 정당이며 지지자들의 숫자도 적은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면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지정당이 달라도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치 이념 또한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아니었다. <그림 II-4>에서 진보 응답자의 21.2%가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보수 응답자의 경우도 24.6%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보수나 진보 정치 이념은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외로 지지 정당이나 정치이념은 민족주의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림 II-5>는 세대별로 민족주의적 성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II-4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 - 이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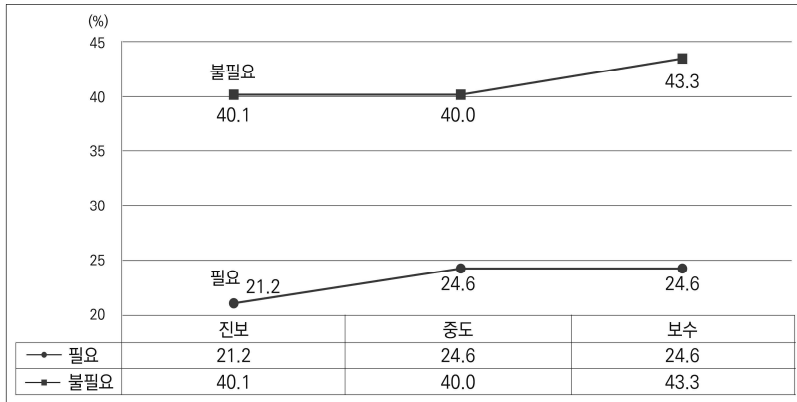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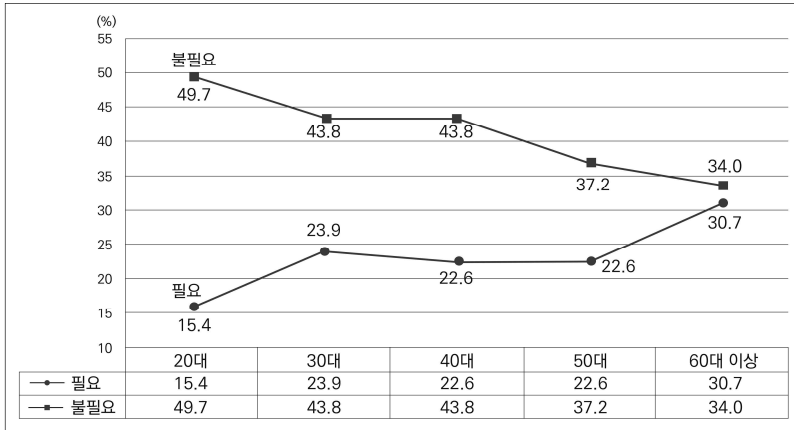


그림 11-5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 - 세대별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20대와 30대는 탈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 변수로 각 세대를 비교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족주의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필요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즉,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통일은 민족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없었다.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남과 북이 혈연과 역사, 언어로 이어진 하나의 민족공동체라는 사실이 통일과정에 수반될 여러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는 아닌 것이다.

### 3. 통일의식과 북한인식의 상관관계

#### 가. 북한인식 4군집 모형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의 이론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sup>13)</sup> 여기서 북한인식 4군집 모형에 대해 다시 한

<sup>13)</sup>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서울: 통일



번 간략히 소개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고립주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인식 4군집은 정치 이념이나 정당 지지와 구별되며, 대북정책 선호나 통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현실주의(realism)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북한을 대결과 경계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며,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북한을 다루는 옳은 길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현실에 있어 이른바 정치적 ‘보수’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용주의(pragmatism)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아래 설명할 자유주의와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찬성하면서도, 경제 및 사회 문화 협력을 통한 남북 긴장 해결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해 협력과 제재라는 다른 수단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이른바 ‘진보’가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신하며,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협력이나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해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정치적으로는 현실주의와 대척 지점에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원, 2015), pp. 181~218; 박종철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134~148.

마지막으로 고립주의(isolationism)는 세 유형 중 현재로서 가장 그 비중이 작긴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북한인식의 유형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대결도, 협력도 원하지 않는 집단이다. 이 사람들은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며, 통일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 4군집 모형의 측정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냐(북한 이미지)에 대한 4개 문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협력대상”, “지원대상”, “적대대상”, 그리고 “경계대상”으로서의 북한을 묻고, 이를 11점 척도<sup>14)</sup>로 측정하였다.

표 II-11 북한 이미지 평균값 비교

	2016년도			2017년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지원대상	1,005	4.40	2.62	1002.00	4.04	2.42
적대대상	1,005	5.74	2.54	1002.00	6.09	2.34
협력대상	1,005	5.00	2.45	1002.00	4.71	2.34
경계대상	1,005	6.38	2.37	1002.00	6.56	2.26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표 II-11〉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조사된 북한의 4개 이미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비교하고 있다. 2016년 지원대상 이미지의 평균값이 4.40 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04로 낮아졌으며<sup>15)</sup> 또한 협력대상 이미지의 평균값도 5.00에서 4.71로 낮아졌다.<sup>16)</sup> 반면 적대대상 이미지의 경우는 5.74에서 6.09로,<sup>17)</sup> 경계대상 이미지는 6.38에서 6.56으로

14) 0= 전혀 동의안함; 5= 중도; 10=매우 동의함.

15) 99.9% 유의수준에서 유효한 차이.

16) 99% 유의수준에서 유효한 차이.

17) 99% 유의수준에서 유효한 차이.

상승한<sup>18)</sup>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호 혹은 협력적 이미지는 약화되고, 대결적 혹은 갈등적 이미지는 강화된 것이 2016년과 2017년에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물론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과 전쟁위기의 가속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인식 군집은 이 4개의 북한 이미지 변수를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우선 지원대상 변수와 협력대상 변수를 더하여 새로운 “협력이미지” 변수를 만들고, 적대대상 변수와 경계대상 변수를 합해 “적대이미지” 변수를 만들었다.<sup>19)</sup> 이 두 변수는 모두 최솟값 0과 최댓값 20을 가지며, 그 값이 낮을수록 응답자들의 해당 태도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적대이미지와 협력이미지의 피어슨 상관계수 -0.282로 계산되었다.<sup>20)</sup> 즉, 적대이미지가 높은 사람들은 협력이미지가 낮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태도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그 상관관계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0.282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대이미지와 협력이미지가 모두 높거나 (실용주의), 혹은 모두 낮은 (고립주의)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II-12 북한인식의 4군집

		적대이미지	
		낮음	높음
협력이미지	높음	자유주의	실용주의
	낮음	고립주의	현실주의

<sup>18)</sup>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sup>19)</sup> 협력대상과 지원대상 두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02이었다. 또, 적대대상과 경계대상 두 변수를 대상으로 크론바흐 알파값을 구하면 0.739로, 이 변수들을 합하여 합산 척도를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sup>20)</sup> 99.9%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위의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인식 4군집은 이 협력이미지 변수와 적대이미지 변수를 각각 가로와 세로축으로 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협력이미지가 높은 반면 적대이미지가 낮은 인식 군집이며, 그 대칭점에 있는 현실주의는 반대로 협력이미지가 낮고 적대이미지가 높은 인식 군집이다. 적대이미지와 협력이미지가 둘 다 높은 경우, 즉, 북한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협력도 반대하지 않는 태도가 실용주의이다. 마지막으로 고립주의는 적대이미지와 협력이미지가 모두 낮은 인식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6>, <그림 II-7>, 그리고 <그림 II-8>은 적대이미지와 협력 이미지를 양 축으로 그린 산포도이다. 동그라미의 크기는 해당 지점에 위치한 응답자들의 빈도를 의미한다. <그림 II-6>은 2016년 조사에서의 산포도를, <그림 II-7>은 2017년 조사의 산포도를 그렸다. 마지막으로 <그림 II-8>은 두 조사를 합하여 산포도를 그린 것이다.

그림 II-6 북한 이미지 산포도 -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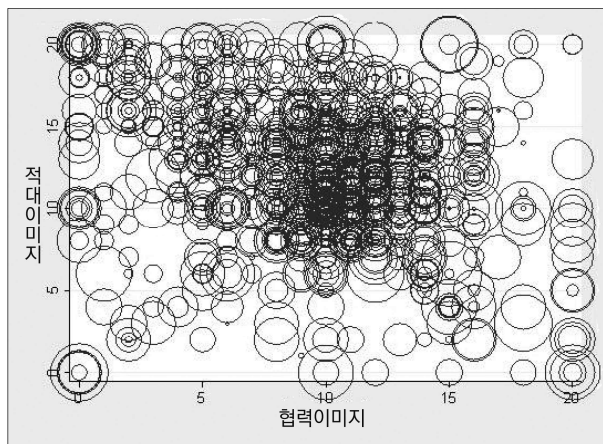


그림 II-7 북한 이미지 산포도 -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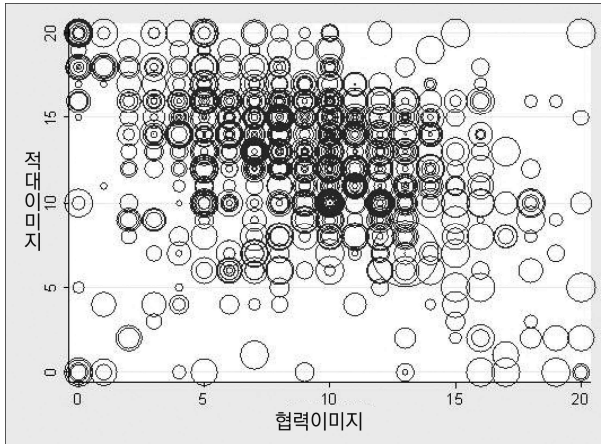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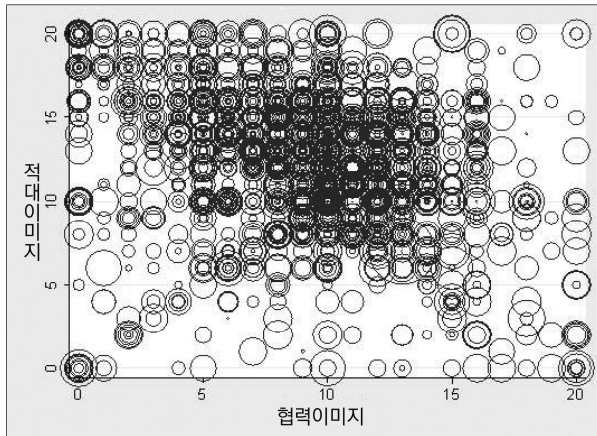


그림 II-8 북한 이미지 산포도 - 2016년 및 2017년 통합



위 산포도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대이미지와 협력이미지 변수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약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sup>21)</sup> 그러나 동시에 산포도 전체 사분면에 응답자들이 넓게 퍼져있는데, 이는 실용주의 및

<sup>21)</sup>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응답자들이 배열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고립주의 인식 군집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협력이미지와 적대이미지의 이러한 관계에서 출발하여 북한인식 군집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이미지 변수의 평균값이다. 협력이미지 변수의 평균값은 9.1, 적대이미지 변수의 평균값은 12.4였다.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북한인식의 4군집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 군집은 협력이미지가 9.1 이하이면서 동시에 적대이미지가 12.4인 사람들로 정의된다. <표 II-13>은 각 군집의 조작적 정의 기준과 그 분포를 정리하여 비교하고 있다.

표 II-13 북한인식 군집의 조작적 정의

	협력이미지	적대이미지	빈도(2016년)	빈도(2017년)
현실주의	< 9.1	> 12.4	260(25.9%)	356(35.5%)
자유주의	> 9.1	< 12.4	174(17.3%)	177(17.7%)
고립주의	< 9.1	< 12.4	374(37.2%)	266(26.6%)
실용주의	> 9.1	> 12.4	197(19.6%)	203(20.3%)
합계			1005(100.0%)	1002(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작적 정의 기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현실주의 인식 군집이 35.5%로 가장 크고, 고립주의 군집이 26.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유주의 군집과 실용주의 군집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이는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의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에 자유주의 군집과 실용주의 군집의 크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현실주의 군집이 10.4%p 커지고, 고립주의 군집이 10.6%p 작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북한과의 협력과 적대적 대응을 모두 거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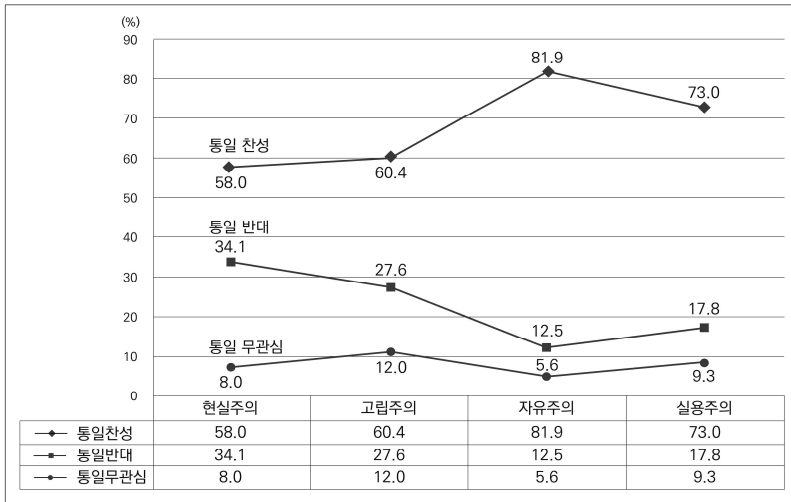
고립주의적 태도가 의미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 나. 북한인식과 통일의식

앞 절에서는 북한인식의 4가지 군집을 이론적·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북한인식 군집이 통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우선, <그림 II-9>는 북한인식 4군집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어떻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와 표로 보여주고 있다.<sup>22)</sup>

그림 II-9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 필요성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자유주의 및 실용주의 군집에서 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유주의 군집에 포함된 사람들의 81.9%가 통일을 찬성했다. 마찬가지로 실용주의 군집의

22) 통일 찬반의 코딩 방식은 <표 II-1>과 <표 II-5> 참조.

73.0%도 통일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주의 군집의 58.0%와 고립주의 군집의 60.4%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다. 따라서 북한인식 군집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II-13>에서, 2016년과 2017년 사이 현실주의 군집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보인 바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양상이 고조되면서 현실주의적 군집이 계속 커진다면,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또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것도 <그림 II-9>가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및 실용주의 군집에 포함된 사람들은 군사적 긴장 악화에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II-14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해야 하는 이유

	현실주의	고립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30.5	30.2	30.5	36.0
남북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18.5	15.6	19.3	13.4
남북한 간의 전쟁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32.2	34.9	26.9	30.5
국제 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4.9	17.9	20.4	17.5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3.9	1.4	2.9	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그렇다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각 북한인식 군집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표 II-14>는 이를 정리했다. 우선 민족주의적 통일



의식이 가장 강한 집단은 실용주의 군집이었다. 36%의 실용주의 군집이 민족주의적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립주의 군집과 현실주의 군집에서는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민족주의적 이유보다는 전쟁 위협의 해소를 통일의 이유로 드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립주의 34.9%, 현실주의 32.2%).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군집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통일의 이유 두 가지는 민족주의와 전쟁 위협 해소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남갈등’ 이론에 따르면,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현실주의)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sup>23)</sup> 그리고 한국에서의 보수 이념은 민족주의적 성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표 II-14>의 분포는 민족주의 통일담론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혹은 협력적 태도와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II-15>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북한인식 군집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현실주의 군집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한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였다(37.6%). 고립주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중요한 반대 이유였으나(34.4%), 이보다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적 차이를 꼽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35.9%).

반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자유주의 군집에서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23.3%)보다도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적 차이가 상당한 비율로 높게 나왔다(36.7%). 실용주의 군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었으나(31.0%),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았다(26.2%).

<sup>23)</sup>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pp. 185~213;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pp. 31~59.

정리하면, 현실주의적 군집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반면, 자유주의 군집은 정치사회적 차이에 의한 혼란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와 대비하여 고립주의와 실용주의의 경우 여러 반대 이유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II-15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

	현실주의	고립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생활과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9.0	9.4	13.3	14.3
통일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37.6	34.4	23.3	31.0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사회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21.8	35.9	36.7	26.2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24.8	18.8	23.3	26.2
한반도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6.8	1.6	3.3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7).

〈표 II-16〉은 북한인식 군집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 명백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비교를 담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군집은 거의 절반의 응답자가(49.4%)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실주의와 고립주의 군집에서는 통일은 북한에게만 이익이며 남한에는 손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0.2%; 56.1%). 실용주의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통일이 남북한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지만(37.3%), 절반이 넘는 (52.3%) 실용주의 군집 응답자들은 역시 통일은 북한에게만 이득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다른 인식과 이해방식이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함의는 통일의식이 약화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의 통일의식 고취 방안을 마련한다면, 먼저 국민들 개개인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각 북한인식 군집에 맞는 맞춤형 방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II-16 북한인식 4군집과 통일의 이해득실 인식

(%)

생각	현실주의	고립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	60.2	56.1	39.4	52.3
남한에는 이득이지만 북한에는 손해다	2.3	4.0	4.8	1.8
남북 모두에 이득이다	30.4	31.1	49.4	37.3
남북 모두에 손해이다	7.1	8.8	6.4	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2016~2017).

〈그림 II-10〉, 〈그림 II-11〉, 〈그림 II-12〉에서는 〈표 II-2〉에서 소개한 통일에 대한 설문들에 대한 반응을 북한인식 군집별로 나누어 그래프와 표로 비교하였다. 우선, 〈그림 II-10〉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라는 항목에 대한 반응이다. 이 문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절대적으로 성취해야 할 국가적 목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주의 군집의 57.9%가 평화공존이라는 가치가 통일보다 더 우선하며, 평화공존이 실현된다면 통일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현실주의와 대치되는 자유주의 군집은 33.1%만이 통일을 선택적 대안으로 인식하여 큰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실용주의와 고립주의는 이 항목에 대한

반응이 유사했으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북한에 대해 현실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통일을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로 보는 반면, 진보는 북한에 대해 자유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보다는 경제적 협력과 평화를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그림 II-10>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보-보수의 통일·대북관과 실제의 통일·대북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상식과는 달리, 현실주의의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의 군집에 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의 군집의 응답자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평화 유지 등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편이었다.

그림 II-10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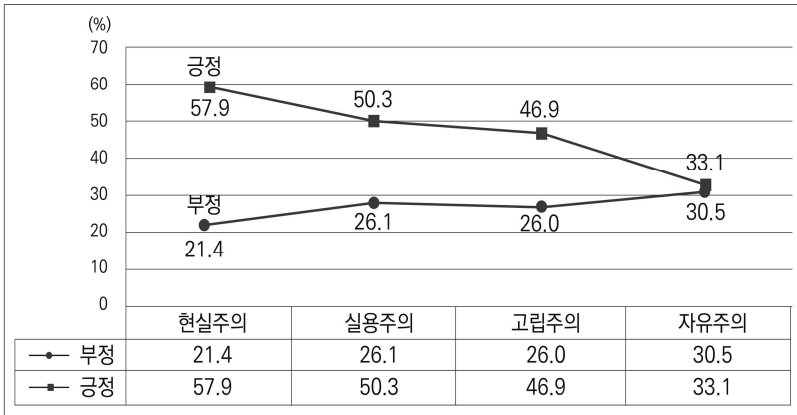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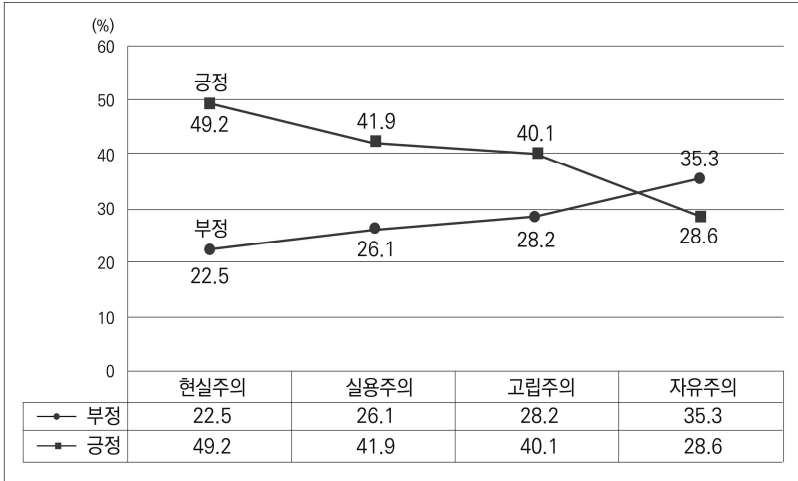


그림 II-11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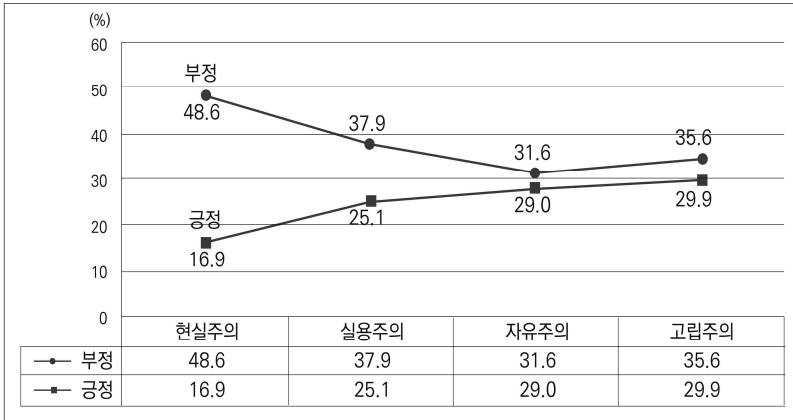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II-11>도 유사한 질문에 대한 각 군집의 반응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의 질문은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분포는 <그림 II-10>과 유사했다. 현실주의 군집에서 통일이 당면 목표가 아니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9.2%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주의 군집에서는 이 문항에 대한 긍정이 28.6%, 부정이 35.3%로 나타나, 다른 세 군집과 달리 유일하게 통일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을 뛰어넘는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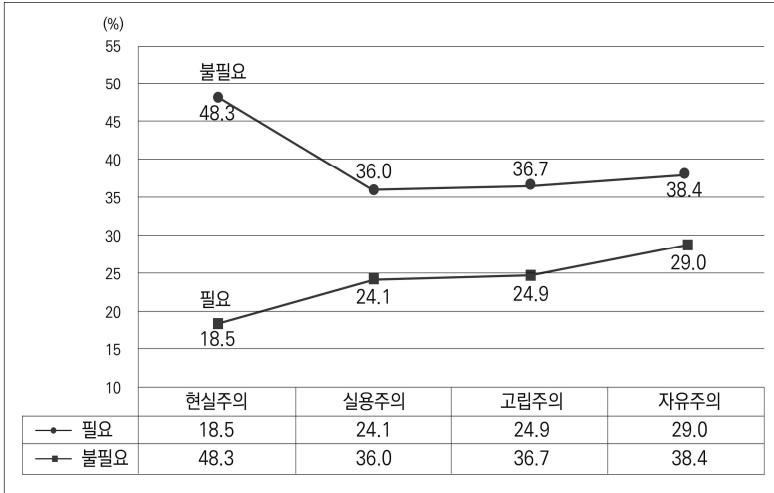
<그림 II-12>의 문항은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앞의 두 문항과 성격이 다른데, 앞의 문항들이 공동체 혹은 국가의 목표 및 정책으로서의 통일을 물었다면, <그림 II-12>의 문항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통일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12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 문항에 대해 가장 뚜렷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현실주의 군집이었다. 현실주의 군집의 48.6%가 통일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으며, 반대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답한 비율은 16.9%에 불과해서 그 차이가 31.8%p에 달했다. 비록 통일이 중요한 개인적 가치라고 답한 비율은 고립주의가 29.9%로 자유주의의 29.0%보다 약간 높지만, 부정 반응과 긍정 반응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현실주의 군집이 31.8%p, 실용주의 군집이 12.8%p, 고립주의 군집이 5.7%p, 그리고 자유주의 군집이 2.6%p로 나타났다. 즉, 자유주의 군집에서 부정 반응과 긍정 반응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 따라서 진보 혹은 자유주의 군집에서 통일 보다는 평화 혹은 협력을 중시한다는 주장은 그 경험적 근거가 부족함을 다시 한 번 <그림 II-12>의 분석이 보여 주고 있다.

그림 II-13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인식 군집



마지막으로 <그림 II-13>은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북한인식 군집별로 비교하였다.<sup>24)</sup> 여기서 사용된 문항은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이다.

앞의 통일 관련 문항들과 <그림 II-13>에 사용된 문항의 차이점은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이다. 여기서는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설득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필요) 혹은 부정(불필요)의 답변은 곧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에 대한 수용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군집이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에 대해 매우 대조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주의 군집의 절반 가까운 48.3%가 민족주의적 통일이 불필요

<sup>24)</sup> 민족주의적 통일 필요성의 내용과 코딩방식에 대해서는 <그림 II-3>, <그림 II-4>, <그림 II-5> 참조.

하다고 답한 반면 자유주의 군집의 경우는 그 비율이 38.4%에 그쳤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자유주의 군집의 경우에도 긍정적 반응의 비율은 29.0%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래프의 분포를 보면 실용주의, 고립주의, 자유주의 군집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현실주의적 군집에서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수용성이 대조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일반적인 대북관·통일관에 대한 상식과 반대되는 결과가 발견되는데, 보수적인 현실주의적 대북관은 민족주의와 친화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보수정권들은 통일 정책을 추구하면서 평화 및 협력 정책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 반면, 진보정권들은 통일보다도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 차원에서는 보수적인 현실주의 군집에서 오히려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설득력이 가장 약했고, 협력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군집에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 4. 소결

지금까지 통일의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연구원 및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통일의식, 즉 통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과 태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둘째, 이렇게 통일의식이 약화되는 이유는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에서 통일을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는 풍조가 저변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의식 약화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동안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되어오던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기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통일의식과 북한인식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보수적인 현실주의적 군집에서 통일의식이 약한 반면, 오히려 통일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자유주의적 군집에서 통일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그러나 이는 군집들 간의 비교이며, 전체적으로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소구력이 약화된다는 경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다섯째, 최근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현실주의적 군집이 강화되는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주의적 군집과 통일의식의 약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군집이 커진다는 것은 곧 전체적인 통일의식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수록 통일의식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Ⅲ. 통일인식의 변화 II: 통일편익론의 등장과 한계

윤지성(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통일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기존에는 주로 남한과 북한이 정치 이념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당위적으로 한 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통일 신라 이래로 고려와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한반도는 한민족의 땅이라는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미국과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적대와 증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로 새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한 통일의 당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관점 이외에 다른 근거로 지금까지 또 다른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일편익론이다. 통일편익론이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일이 경제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남한이 수출 위주의 산업국이자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의 원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 경제의 흐름에 항상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인구가 7,000만 명이 되어 내수시장으로서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국제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의 합작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임금 수준과 숙련도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진출해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다면 다시금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의해 북한의 광물자원은 수출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북한에는 철광석이나 텅스텐 매장

량이 상당하며,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광물자원인 희토류 금속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이러한 광물들을 채굴할 자금과 기술도 부족하고 해외에 수출할 판로도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금과 기술로 이러한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어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 편익론의 가장 최근 버전이 바로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대박론’이다.

통일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통일편익론은 사실 집권세력의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그를 이은 노무현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도 일정 부분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보수적 집권세력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도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흡수 통일에 기반을 둔 통일편익론으로 흘러가게 된 점은 통일편익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일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편익론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2017년 설문에서 이에 대한 설문들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통일편익론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2016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과 동일 문항을 비교해서 지난 1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 1. 통일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2017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을 <표 III-1>로 정리했다. 먼저,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7.3%,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47.5%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 전체 응답자의 64.8%에 달

했다. 반대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22%,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 4.9%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전체 응답자의 26.9%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에 비해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설문조사 결과를 2016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와 비교해 보면, 2016년 조사에서는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5.0%,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58.2%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 전체 응답자의 73.2%였는데, 1년 사이에 그 비율이 8.4% 감소했다. 반대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16.6%,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 2.2%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전체 응답자의 18.8%로 나타났는데, 1년 사이에 그 비율이 8.1%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1년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8% 이상 감소했으며, 이것은 거의 그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가 장기간에 걸친 패널 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설문조사가 각각 이뤄졌던 2016년 6월과 2017년 6월의 1년 사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난 1년 사이에 연이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서 전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

	2016년	2017년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15.0	17.3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58.2	47.5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16.6	22.0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	2.2	4.9
통일에 관심이 없다	8.0	8.4
합계	100	100

〈표 III-2〉에 나타난 것처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을 살펴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4.8%로 나와서 민족주의적 입장이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북한 간의 전쟁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은 28.4%를 차지해서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남북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으며, “국제 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16%로 나타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은 민족주의적 입장에 비해서, 그리고 전쟁위험 제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2017년 응답을 2016년 응답과 비교해보면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이 1년 사이에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설문조사에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1.9%로 민족주의적 통일의 필요성이 1년 사이에 2.9% 증가했으나, “남북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8.8%로서 1년 사이에 11.5%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간의 전쟁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라



는 응답은 19.7%였기 때문에 1년 사이에 8.7%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 통일편익론이 급감한 이유는 이미 언급했듯이 지난 1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이 급증했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으며, 더불어서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쟁위협 제거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 위협 때문에 통일편익론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져서 2016년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입장에 이은 2순위에서 전쟁위협 제거에 이은 3순위로 감소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2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2016년	2017년
같은 민족이기 때문	31.9	34.8
남북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	28.8	17.3
남북한 간의 전쟁위협을 없앨 수 있기 때문	19.7	28.4
국제 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	17.3	16.0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2.3	3.5
합계	100	100

이번에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II-3>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통일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4.2%를 차지함으로써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2016년 설문이 4지선다형이고 2017년 설문이 5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16년 설문에서도 경제적 부담이라

는 응답이 5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통일로 인해서 남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에서는 통일편익론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볼 때 통일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1년 사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 감소했으며, 공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공감은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통일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통일편익론이 국민들에게 점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III-3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016년	2017년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생활과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	11.1	10.4
통일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	52.9	34.2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사회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	33.9	27.5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	-	23.4
한반도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	2.1	4.5
합계	100	100

## 2. 통일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지금까지의 논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표 III-4>는 통일이 이뤄진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로 인해서 서로 이득을 볼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라는 입장이 56.6%로 2016년의 46.0%에 비해서 10.6% 상승했으며, “남북 모두에 이득이다”라는 입장이 32.9%로 2016년의 42.9%에 비해서 10%가 감소했다. 통일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더 큰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2016년에는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라는 입장과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입장이 3.1%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2017년에는 그 차이가 23.7%로 확 벌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1년 사이에 통일의 편익에 대한 매력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떨어졌으며, 통일을 해도 결국 북한에만 이득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서의 분석결과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서도 경제적 이득으로 인한 것을 꼽는 국민들이 감소했으며,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드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는 점은 통일대박론과 같은 통일편익론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안보 위협을 통해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 편익이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되며 북한에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통일편익론이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III-4 통일 후 남북한 각 측의 이득과 손해에 대한 생각

(%)

	2016년	2017년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	46.0	56.6
남한에는 이득이지만 북한에는 손해다	3.9	2.7
남북 모두에 이득이다	42.9	32.9
남북 모두에 손해이다	7.3	7.8
합계	100	100

위에서 통일 편익이 주로 북한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은 북한이라는 국가와 남한이라는 국가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인식과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식은 분리될 수 있다. 개인인 나 자신과 수많은 개인들의 집합체인 국가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속성으로부터 집단의 속성을 유추하는 것도, 반대로 집단의 속성으로부터 개인의 속성을 유추하는 것도 오류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이 주는 이익을 대한민국 국가 전체와 나 자신, 그리고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으로 나눠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표 III-5〉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들은 개인 차원과 개인의 집합인 남한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실체에 있어서 통일 편익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로서는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7.5%, “대체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50.9%로서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58.4%였다. 이에 비해서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이 남한 주민에게는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2.2%, “대체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30.0%로서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32.2%였다. 반면에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1.4%, “대체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19.1%로서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겨우 20.5%에 불과했다. 따라서 통일 편익에 대한 인식은 북한과 남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은 사실 응답자 개인에게 설득력 있게 와 닿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설문 응답자들은 자기 자신과 개인들이 모인 집단인 남한 주민들, 그리고 국가 전체에 대해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로는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편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이 집합적이고 추상적인 데 반해서, 통일로 인해서 가중될 경제적 부담은 개인이 진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5 통일이 주는 국가, 자신, 남북한 주민의 이익에 대한 생각

(%)

	대한민국 국가 전체	자기 자신	북한 주민	남한 주민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8.9	21.6	1.0	9.0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32.7	58.0	7.1	58.8
대체로 이익이 된다	50.9	19.1	66.5	30.0
매우 이익이 된다	7.5	1.4	25.4	2.2
합계	100	100	100	100

즉,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은 추상적이지만, 통일로 인해 스스로가 부담할 비용은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이 주는 편익이 북한 주민에게는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25.4%, “대체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66.5%로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무려 91.9%에 달한다. 이것은 <표 III-4>에서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라는 응답 56.6%와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다”라는 응답 32.9%를 더한 수치인 89.5%와 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북한 주민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과의 통일을 남한의 흡수통일로 암묵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편익을 얻는 북한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 주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나뉘어서 바라볼 수 있으며, 통일에 대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통일의 편익은 어떻게 현실화될지 알 수 없으며,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통일대박론’과 같은 통일 편익 논의는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며,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개인적 차원에서는 쉽게 설득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통일로 인해서 개인이 짊어지게 될 비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와 닿으며, 통일로 인해서 통일세 등 증세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로 인한 편익보다는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이것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의 편익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며, 통일의 비용은 개인적 차원에서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고, 그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 3.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통일편익론은 지금까지 통일이 이루어지면 얻게 될 경제적 편익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을 이루면 통일에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엄청난 북한에 대한 각종 비용이 들어갈 것이 명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도로나 철도, 공항을 비롯한 여러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 기관 교통망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남한지역 국민들의 증세를 통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형태인 반면에, 통일로 인한 비용은 단기적으로도 확실해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설문들에 대해서 <표 III-6>에 분석결과를 정리했다.

표 III-6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세금인상 찬성	분단손해>통일비용	통일문제<경제문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6.1	0.9	0.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5	13.3	6.8
보통이다	28.1	34.8	26.4
대체로 동의한다	20.6	41.6	47.5
매우 동의한다	1.7	9.4	18.7
합계	100	100	100

<표 III-6>의 첫 번째 항목은 “나는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6.1%,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33.5%로서 부정적인 의견이 49.6%에 달한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가 20.6%, “매우 동의한다”가 1.7%로서 긍정적인 의견은 22.3%에 불과했다. 통일 비용으로 인한 세금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에 비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무려 2배를 뛰어 넘으며, 거의 과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 비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편익론이 국민들 개인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체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돌아올 경제적 편익보다는 통일을 하면 국민 개인이 바로 겪게 될 증세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개인이 직접 맞닥뜨릴 세금인상이란 현실과 다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분단으로 인한 손해가 통일로 인한 비용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9%,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13.3%로서 통일 비용이 더 크다는 입장은 14.2%에 불과하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는 41.6%, “매우 동의한다”는 9.4%로서 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더 크다는 입장이 51.0%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는 분단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개인이 북한을 위해 내어야 하는 증세비용은 부담스러운 것이 국민들의 시각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통일문제와 경제 문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6.8%로 통일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은 7.4%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체로 동의한다”는 47.5%, “매우 동의한다”는 18.7%에 달해서 경제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전체 응답자



의 6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설문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일문제보다는 경제문제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세금인상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와 개인적 차원에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비용의 부담과 함께 경제문제가 더 우선순위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설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놓은 <표 III-7>을 보면, 통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44.5%를 차지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통일로 인한 세금인상이 부담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표 III-6>에서 통일에 대한 세금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인 49.6%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연 1만 원 미만”이 22.7%, “연 1만 원~10만 원 이하”가 25.0%를 차지함으로써 통일로 인한 비용부담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10만 원 이하 정도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만 원 이상의 세금인상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전체의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담하고 싶지 않다”와 “연 1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합쳐서 생각하면 통일로 인한 세금 인상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의 2/3를 넘게 차지하는 실정이라서 <표 III-3>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통일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 통일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 및 비용부담 정도

(%)

	응답자
부담하고 싶지 않다	44.5
연 1만 원 미만	22.7
연 1만 원 ~ 10만 원 이하	25.0
연 11만 원 ~ 20만 원 이하	5.5
연 21만 원 ~ 50만 원 이하	1.4
연 51만 원 ~ 100만 원 이하	0.7
연 101만 원 이상	0.2
합계	100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 이후의 경제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III-8>이다. 먼저 통일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설문이 “통일이 되던 안되던 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1%로서 통일의 여부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의견이 14.4%였으며, “대체로 동의한다”가 51.0%, “매우 동의한다”가 8.5%로서 통일 여부가 자신의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59.5%에 달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응답은 통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증가 때문이고 통일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에 대한 답변에서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음을 상기할 때, 통일 여부가 내 생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에 가깝게 나타났다는 것은 인식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인상과 같은 비용부담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적 차원

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이 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앞에서 보듯이 분단으로 인한 손해가 통일을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내가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피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표 III-8 통일 이후의 경제적 전망

(%)

	통일여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통일을 위해 내가 조금 희생가능	통일 이후 남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3	17.2	6.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2.1	40.8	20.3
보통이다	26.1	28.0	28.1
대체로 동의한다	51.0	13.6	36.3
매우 동의한다	8.5	0.4	9.0
합계	100	100	100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7.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8%로서 통일로 인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 58.0%에 달했다. 반대로 “대체로 동의한다”는 13.6%, “매우 동의한다”는 0.4%로서 긍정적인 입장이 14.0%에 불과함으로써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통일 이후 남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 주민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6.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20.3%로 부정적인 입장이 26.6%였다. 그러나 “대체로 동의한다”가 36.3%, “매우 동의한다”가 9.0%로서 긍정적인 입장은 45.3%에 달했다. 분명히 통일을 위해 내가 조금 희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남한 주민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통일의 편익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적 차원으로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개인의 차원에서는 모호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통일의 비용은 통일로 인해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함께 비용을 나눠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인 차원에서는 최대한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통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지금까지 통일편익론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비용의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통일이 가져오는 비용은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버릴 경우 북한의 난민들이 남한으로 몰려올 텐데 이러한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런 사회적 비용의 대표적인 상황이다. 또 다른 예로써, 현재 남한과 북한은 경제적 수준의 격차, 지난 50년간의 단절로 인한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이질감이 상당하며,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어 한 나라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의 결과로서 실업문제나 범죄의 증가를 우려할 수 있고, 독일의 통일 이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의 지역갈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갈등은 현재의 영남지역과 호남 지역의 지역갈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드는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통일이 이뤄지면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 III-9〉에서 가장 쉽게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인 빈부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남북한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놓았다. 먼저 빈부격차부터 살펴보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36.6%,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44.7%로 빈부격차가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81.3%에 이르고 있다.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현재 아주 크기 때문에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의 빈부 격차는 현재 남한 내부에서의 빈부 격차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것은 세대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30.9%,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2.2%로서 세대갈등이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리라는 예상이 73.1%로 나타난다. 현재 남한에서의 세대갈등은 인구구조와 실업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이지만,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의 세금부담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새로운 갈등의 축으로서 등장하게 되어 기존보다 세대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9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의 변화양상에 대한 생각 (1)

	빈부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남북한 지역갈등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36.6	30.9	44.8	32.1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	44.7	42.2	36.4	44.7
지금과 마찬가지로	14.1	23.9	11.9	13.4
지금보다 약간 더 나아질 것이다	4.0	2.7	6.0	8.9
지금보다 매우 더 나아질 것이다	0.6	0.3	0.9	0.9
합계	100	100	100	100

이념갈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44.8%,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36.4%로서 이념갈등이 현재보다 심각해지리라는 예상이 역시 81.2%에 이른다. 남한 내에서의 이념갈등은 주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 부담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과의 정치적 인식이 확연히 다르리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갈등뿐만 아니라 북한지역 주민들과의 이념갈등까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남북한 지역갈등에서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32.1%,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4.7%로서 이념갈등이 현재보다 심각해지리라는 예상 역시 76.8%에 달한다. 이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서독과 동독의 지역 격차는 상대방해서 통일 이후 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감이 좁혀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동독지역도 그런 경제적 격차로 후유증을 앓았는데, 그보다 경제적 격차가 훨씬 극단적인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은 지역갈등이 더 극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II-10〉에서도 또 다른 현재 남한의 사회적 문제들인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가 통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32.3%,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35.1%로서 부동산 투기가 현재보다 심각해지리라는 예상이 67.5%에 이르고 있다.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형성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해지리라는 예상이 낮게 나온 편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 문제도 더 나빠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업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24.4%,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36.0%로서 실

업문제가 현재보다 심각해지리라는 예상이 60.4%로 나타난다. 실업문제가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리라는 예상이 60%로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 이것은 북한지역 산업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의 변화양상에 대한 생각 (2)

(%)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32.3	24.4	28.6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	35.1	36.0	48.0
지금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23.1	21.6	20.7
지금보다 약간 더 나아질 것이다	6.9	15.7	2.6
지금보다 매우 더 나아질 것이다	2.6	2.4	0.1
합계	100	100	100

마지막으로 범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28.6%,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8.0%로서 범죄 문제가 현재보다 심각해지리라는 예상이 76.6%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는 것은 난민 문제나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 등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빈민층으로 편입되거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증오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7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통일이 된 후에 기존의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편익론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편익에다가 통일 비용과 더불어 통일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혼란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통일 편익론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즉, 통일편익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통일이 대박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렇게 진지하게 믿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통일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와 사회적 문제로 인한 혼란비용의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 5. 심층분석

지금까지의 2017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역, 이념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사회경제적 변수가 통일편익론의 주요 주장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독립변수로 사용할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성별: 0=남성; 1=여성
-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이하; 3=대졸 이상
- 연령대: 1=19~29세; 2=30~39세; 3=40~49세; 4=50~59세; 5=60세 이상
- 소득: 1=200만 원 미만  
2=200만 원~300만 원 미만  
3=300만 원~400만 원 미만  
4=400만 원~500만 원 미만  
5=500만 원 이상
- 영남지역: 1=대구, 경상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유권자  
0=기타지역 유권자
- 호남지역: 1=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 유권자  
0=기타지역 유권자



- 대구경북지역: 1=대구, 경상북도 지역 유권자  
0=기타지역 유권자
- 부산울산경남지역: 1=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유권자  
0=기타지역 유권자
- 이념: 자신의 이념을 스스로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해서 11점 척도에  
서 진보=0~4; 중도=5; 보수=6~10으로 잡고 진보=1, 중도=2,  
보수=3으로 코딩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 자기 자신, 북한 주민, 남한 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 문항들은 종속변수들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이익이 된다”, “매우 이익이 된다”의 4점 척도로 이뤄져 있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에서 “이익이 된다”로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III-11>에 정리해서 수록하였다.

표 III-11 통일의 편익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통일의 편익	대한민국 국가 전체	자기 자신	북한 주민	남한 주민
여성	-0.30** (0.12)	-0.40*** (0.13)	-0.11 (0.13)	-0.27** (0.13)
연령	0.20*** (0.05)	0.12** (0.05)	0.12** (0.06)	0.13** (0.05)
학력	0.56*** (0.11)	0.29** (0.11)	0.27** (0.12)	0.34*** (0.11)
소득	-0.03 (0.05)	-0.06 (0.05)	-0.15*** (0.06)	-0.04 (0.05)
호남	-0.73*** (0.21)	-0.65*** (0.21)	0.21 (0.22)	-0.60*** (0.22)

종속변수: 통일의 편익	대한민국 국가 전체	자기 자신	북한 주민	남한 주민
영남	-0.88*** (0.15)	-1.05*** (0.15)	0.07 (0.16)	-0.38** (0.15)
이념	-0.08 (0.08)	-0.15* (0.08)	-0.03 (0.09)	-0.18** (0.08)
N	1,001			
Pseudo- $R^2$	0.04	0.04	0.01	0.02

주: \* p<0.1, \*\* p<0.05, \*\*\* p<0.01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더미(호남, 영남)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서 호남지역 거주자와 영남지역 거주자 모두 통일이 대한민국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영남지역 거주자와 호남지역 거주자가 동일하게 통일이 대한민국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 응답자의 이념을 통제하더라도 영남지방의 지역적 보수성과 호남지방의 진보적 특성 때문에 특히 통일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념적 갈등축이 걸려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영남지역 거주자와 호남지역 거주자가 보통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통일의 편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두 지역 거주자들이 같은 입장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통일이 자기 자신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이나 통일이 남한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념 변수의 영향력이 다른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남한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는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통일이 남한 주민에게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에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 전체, 자기 자신, 남한 주민에게 있어서는 비슷했던 시선이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 학력, 소득으로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가 전체, 자기 자신, 남한 주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통틀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연령과 학력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의미에서 그렇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민족주의의 영향이나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평화추구라는 점에서 통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 변수와 학력 변수는 서로 다른 의미에서 그렇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다.

표 III-12 통일을 위한 세금 부담 정도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세금부담 의향	모델 1	모델 2
여성	-0.48*** (0.12)	-0.50*** (0.12)
연령	0.25*** (0.05)	0.25*** (0.05)
학력	0.25** (0.11)	0.26** (0.11)

종속변수: 세금부담 의향		모델 1	모델 2
소득		0.14*** (0.05)	0.14*** (0.05)
호남		-0.27 (0.20)	-0.26 (0.20)
영남	대구/경북	-0.51*** (0.15)	-1.23*** (0.23)
	부산/울산/경남		-0.11 (0.17)
이념		-0.49*** (0.08)	-0.46*** (0.08)
N		1,001	1,001
Pseudo- $R^2$		0.04	0.04

주: \*  $p < 0.1$ , \*\*  $p < 0.05$ , \*\*\*  $p < 0.01$

그 다음으로 통일 비용을 위해서 1년에 얼마나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서 <표 III-12>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지역더미 변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모델 1과 모델 2로 구분했는데, 모델 1은 영남 지역 더미변수를 사용했고, 모델 2는 영남 지역 대신 대구/경북 지역 더미변수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더미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세금을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이념, 그리고 영남 지역 더미변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의향이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 비용을 위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려고 한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남지역 거주자는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것은 보수적일수록 마찬가지로 통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남지역 거주자를 대구경북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로 나눠서 본 모델 2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는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델 1에서 나타났던 영남지역 더미변수의 효과가 사실은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는 호남지역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거주자들과 세금부담 의향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은 계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 비용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I-13 사회적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사회적 비용		모델 1	모델 2
여성		-0.10*** (0.04)	-0.10*** (0.04)
연령		-0.01 (0.02)	-0.01 (0.02)
학력		-0.05 (0.03)	-0.06* (0.03)
소득		0.01 (0.02)	0.01 (0.02)
호남		-0.39*** (0.06)	-0.39*** (0.06)
영남	대구/경북	-0.24*** (0.04)	-0.20*** (0.06)
	부산/울산/경남		-0.26*** (0.05)
이념		-0.06** (0.02)	-0.06** (0.02)
상수		2.41*** (0.12)	2.42*** (0.12)
N		1,001	1,001
$R^2$		0.06	0.06

주: \* p<0.1, \*\* p<0.05, \*\*\* p<0.01

마지막으로 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 사회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앞에서 빈부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남북 지역 간 갈등, 부동산 투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등의 7가지 문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7가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결국 통일 이후에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는 비슷한 지표였으며, 앞에서의 응답결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7가지 문제인식에 대한 설문 측정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부터 “지금보다 매우 더 나아질 것이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합산하고 평균을 내어 ‘사회적 비용’이라는 단일한 지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단일한 지표를 종속변수로 삼아서 회귀분석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를 <표 III-13>에 정리하였다. 모델 1은 바로 앞의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남 지역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델이고, 모델 2는 영남 지역 더미변수 대신에 대구/경북 지역 더미변수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더미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모델 1에서 통일 이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이념, 지역 더미(호남, 영남) 변수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통일 이후 사회적 비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통일 이후 사회적 비용이 더 들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거주들이 통일 이후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모델 2에서도 영남지역 거주자를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두 지역 거주자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통일 이후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표 III-12>에서 보여주는 세금 부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6. 요약 및 결론: 통일편익론의 한계

먼저, 본 장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은 민족주의적 입장에 비해서, 그리고 전쟁위험 제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통일편익론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서도 경제적 이득으로 인한 것을 꼽는 국민들이 감소했으며,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드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는 점은 통일대박론과 같은 통일편익론이 지난 1년 동안의 북한의 안보 위협을 통해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 편익이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되며 북한에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통일편익론이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돌아올 경제적 편익보다는 통일을 하면 국민 개인이 바로 겪게 될 증세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와 개인적 차원에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비용의 부담과 함께 경제문제가 더 우선순위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편익론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편익에다가 통일 비용과 더불어 통일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혼란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통일편익론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즉, 통일편익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통일이 대박

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렇게 진지하게 믿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통일로 인한 세금 부담의 증가와 사회적 문제로 인한 혼란비용의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으로 민족주의의 대안으로서 통일 편익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이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편익은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경제논리에 불과한 것이며, 통일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편익론에서는 통일 편익이 통일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미래 가치로만 설명을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계로는 통일 편익의 수혜자가 남한 사람들로 국한이 되어 있고, 통일편익론에서 북한 주민들은 일종의 착취 대상처럼 취급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통일편익론은 한국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통일 이후 한 국가의 국민이 될 북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편익론은 현실성이 결여된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국가정체성으로서 내세우기 힘든 종류의 논의일 수밖에 없다.



# IV. 통일인식의 변화 III: 가치 기반 통일담론의 가능성

윤광일(숙명여자대학교)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 1. 국가정체성

## 가. 국가정체성 개념 논의

심리학에서 정체성은 자기(self)와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는 시간과 사회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및 집단 소속(group affiliation)에 따라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개인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개념적 도구이다.<sup>25)</sup> 한 개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속성으로 구성된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회 범주, 속성, 자기 개념(self-concept) 요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6)</sup> 따라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또는 집단의 성원으로서 개인 그리고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정체성은 더 유용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한 개인을 다른 나라 국민과 구분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과 공유하고 있는 자기 개념의 속성으로서 사회정체성 곧,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지구화와 지역통합 그리고 이주와 다문화주의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정체성은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가?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새로운 정치공동체에서 ‘나’가 아닌 ‘우리’로 만드는 바탕이 될 국가정체성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가?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자기 동일시(self-identification) 내지는 소속감, 국민과 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감 곧, 애국심, 국민의 기준과

---

<sup>25)</sup> Phillip L. Hammack, "Theoretical Foundations of Identity," in *The Oxford Handbook of Identity Development*, eds. Kate C. McLean and Moin Sy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11~13.

<sup>26)</sup> Marilynn Brewer,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7, no. 5 (1991), pp. 475~476; Kristen Renwick Monroe, James Hankin, and Renée Bukovchik Van Vechten,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dentity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1 (2000), pp. 420~422.

범위를 규정하는 규범적 내용으로 구성된다.<sup>27)</sup> 대체로 이 규범적 내용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연유하기보다는 엘리트에 의해 고안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기준과 범위는 특정 국가의 개인들을 국민으로 통합시키고 다른 나라 국민들과 구분하게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시민권(citizenship) 문제인 국민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정체성의 근원에 대한 것인데 반해 소속감과 애국심은 국가정체성의 심리적 귀결 내지는 ‘정치화된 집단의식(politicized group consciousness)’이며, 정책적 함의에 있어서도 이 규범적 내용은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국민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규범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념형으로서 시민-영토적(civic-territorial) 요소와 인종-혈통계보적(ethnic-genealogical) 요소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sup>28)</sup> 전자는 전통적으로 서구 국가 모델에서 강조하는 요소로 국가를 특정 역사적 영토 내에서 공통의 시민 문화(civic culture)와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평등한 성원으로 구성되는 법적·정치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데 반해

<sup>27)</sup> Jack Citrin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참조.

<sup>28)</sup>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pp. 1~178; Frank L. Jones and Philip Smith,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Patterns,” *Journal of Sociology*, vol. 37, no. 1 (2001), pp. 45~63; Frank L. Jones and Philip Smith,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no. 2 (2001), pp. 103~118; Stephen Shulman, “Challenging the Civic/Ethnic and West/East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5, no. 5, (2002), pp. 554~585; Robert M. Kunovich,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no. 4 (2009), pp. 573~593; Nenad Miscevic, “National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December 15, 2014), ed. Edward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4/entries/nationalism/>> (검색일: 2017.10.23.).

후자는 동유럽과 아시아의 신생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서구 국가 모델에서 강조하는 요소로 국가를 ‘상상의 거대 가족(fictive super family)’ 곧, 공통의 혈연 공동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서구 모델에서는 개인이 법적·정치적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비서구 모델에서는 출생국 외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sup>29)</sup>

국가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이념형적 구분은 이후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론적 유용성이 뒷받침 되었다. 예컨대, Jones와 Smith는 1995년 미주,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2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evey Programme: ISSP)에서 사용한 7개 항목의 국가정체성 모듈을 통해 시민-영토적 요소와 유사한 주관적 시민/주의주의(civic/voluntarist) 차원과 인종-혈통계보적 요소와 유사한 귀속적/객관주의(ascriptive/objectivist) 차원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sup>30)</sup> 이들에 의하면 전자에는 정치제도 및 법 존중과 국민감정 요소가 속하고 후자에는 출생, 국적, 장기 거주, 종교 요소가 속한다. 언어는 이론적으로 귀속적 차원에 속하는 요소로 상정했으나 경험적으로는 시민덕성(civic virtue)을 촉진하는 시민적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국가정체성 요소 중 시민정체성보다는 인종정체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31)</sup> 또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전형인 미국의 시민을

<sup>29)</sup> Smith, *Ibid.*, pp. 1~178.

<sup>30)</sup> Jones and Smith,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Patterns,” pp. 45~63; Jones and Smith,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pp. 103~118.

<sup>31)</sup> Jones와 Smith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이와 같은 분류가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개별 국가 수준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컨대, 언어는 귀속적 요소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이민국가에서는 시민정체성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정치제도 및 법 존중과 국민감정도 인종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한 강한 정체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Shulman(2002)은 국가정체성 요소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영토, 국적, 동의, 정치이데올로기, 정치제도와 권리 요소로 구성된 시민정체성과 혈통과 인종(race)으로 구성된 인종정체성 외에 종교, 언어, 전통 요소로 구성된 ‘문화’ 차원을 추가했다. Jones and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두 차원의 국가정체성이 확인되었다.<sup>32)</sup>

한편, 국가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현실에서의 국민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인종정체성과 시민정체성 요소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종정체성에 공통 혈연 요소보다는 종교, 언어, 전통 등 ‘인종문화(ethnocultural)’ 요소를 강조하는 문화(cultural) 차원이 제시되기도 한다.<sup>33)</sup> 또한, ISSP 조사 자료 분석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한 대로 국민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여전히 인종 또는 인종문화 요소를 시민적 요소보다 중시하고 있다.<sup>34)</sup>

국가정체성 요소에 대한 역사적·이념형적 구분과 경험적 연구는 국내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강원택(2011)은 정치공동체 속의 ‘우리’는 누구이고, 외부의 ‘그들’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정치적 정체성을 제시하고 이는 정체성의 상이함을 포함하는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인 국민 또는 국가정체성과 혈연적 의미가 강한 민족적 정체성이 중층적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sup>35)</sup> 박종철(2016)은 통일 이후 제도, 가치, 국가,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될 남북한 정치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정체성 개념을 도입한다.<sup>36)</sup> 그는 국가정체성을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일체

---

Smith,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p. 49; Shulman, “Challenging the Civic/Ethnic and West/East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p. 561.

32) Elizabeth Theiss-Morse, *Who counts as an American?: the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Citrin and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참조.

33) Shulman, “Challenging the Civic/Ethnic and West/East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pp. 554~585.

34) Miscevic, “National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December 15, 2014), ed. Edward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4/entries/nationalism/>> (검색일: 2017.10.23.).

35)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재)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 11~12.

36) 박종철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p. 4.

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바람직한 제도와 가치관을 지향하는 집단적 의식”으로 정의하여 정체성의 기준을 정치적 제도와 규범이 작동하는 국가에서 찾아 혈연적·정서적·문화적 요인에 근거한 민족 정체성과 구분한다.

국가정체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장승진(2010)은 앞서 소개한 Jones와 Smith의 국가정체성 논의를 원용하여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 국가정체성을 시민적(civic) 정체성과 인종적(ethnic) 정체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경험적으로 측정했다.<sup>37)</sup> 해당 조사에서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한국의 국적을 갖는 것, ②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③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④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⑥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⑦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리고 ⑧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의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물어보았는데, 그는 ①-④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정체성 모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나머지 ⑤-⑧의 요건들은 개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인종정체성 모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분류한 후, 각 정체성 변인을 해당 항목의 평균으로 측정했다.

그는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변인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0.67)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변인이 각각의 개념적 정의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주자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예컨대, 인종정체성은 이민자 수 억제에 독립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시민정체성의 독립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민정체성은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sup>37)</sup> 장승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3호(2010), pp. 109~110.

찬성하게 하는 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인종정체성은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국가정체성 요소 모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 통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 나. 국가정체성 구성요소 선호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조사(ISSP)와 KGSS의 2010년 국가정체성 측정 모듈 9개 항목을 이용하여 국가정체성 구성요소 선호도를 측정했다(〈표 IV-1〉 참조).<sup>38)</sup> 우선, “한국의 국적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과반수(50.7%)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국 사람으로 “느끼는 것”(감정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게 나타난 1995년 ISSP 23개국 조사 결과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해당 항목은 40.5%의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해 국적 항목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SSP 조사 평균 63%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또한 ISSP 조사에서는 감정 다음으로 언어와 국적 항목이 평균 53%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전통으로 측정된 이번 조사와 달리 종교 항목으로 측정된 ISSP 조사에서는 평균 20%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항목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sup>39)</sup>

<sup>38)</sup> KGSS는 2010년과 2013년에 국가정체성 조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대신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을 추가했다가 2013년 조사에서는 문화적 전통 항목 대신 다시 유교 관련 항목을 사용했다. 또한 2010년과 2013년 조사 모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추가하여 9개 항목으로 국가정체성을 측정했다. 한편,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5년마다 국가정체성을 측정할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도 다소 다른 자구 선택이지만 7개의 항목으로 국가정체성을 측정했다.

<sup>39)</sup> ISSP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을 참조. Frank L. Jones and Philip Smith,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국적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이번 조사의 결과는 KGSS의 2003년(48.1%), 2010년(51.3%), 2013년(56.6%)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sup>40)</sup> 한국 국적 취득은 EU국가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외국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크지 않은데 이는 국적이 한국에서는 시민정체성보다는 인종정체성 요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sup>41)</sup> 이와 관련 Jones와 Smith(2001)는 다른 정체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나라에 따라 함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국적은 일반적으로 출생과 장기간 거주 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체성의 귀속적 요소로 분류한다.<sup>42)</sup> 또한, 국적을 시민정체성 요소로 분류한 Shulman(2002)도 국적은 취득 희망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다른 시민정체성 요소에 비해 충족시키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사실을 인정한다.<sup>43)</sup> 아울러 한국 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ISSP 1995년 및 2003년 자료 통합연구에서도 경험적으로 국적은 귀속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sup>44)</sup> ISSP 국제조사와 이번 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주관적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도 국적 항목을 시민정체성 요소로 파악한 일련의 선행연구(장승진

---

Patterns,” *Journal of Sociology*, vol. 37, no. 1 (2001), pp. 45~63.

40) 참고로 KGSS 감정 항목은 2003년(56.6%), 2010년(58.7%), 2013년 (58.4%)로 나타나 ISSP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가장 중요한 국가정체성 요소로 나타났다.

41) Kyung Ock Chun and Kwang-Il Yoon, “MIPEX and Korea: Assessment and Lesson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 4, no. 2 (2014), pp. 41~43.

42) Jones and Smith,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pp. 103~118.

43) Shulman, “Challenging the Civic/Ethnic and West/East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pp. 554~585.

44) Kunovich,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pp. 579~581; 정기선·이선미, “기획특집: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2011), pp. 54~55.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등)와 달리 인종정체성 요소로 파악했다.

표 IV-1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단위: 명, %)

정체성 요소	항목	매우 중요	대체로 중요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시민 정체성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47	543	104	8	1,002
		34.63	54.19	10.38	0.80	100.0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	373	550	74	5	1,002
		37.23	54.89	7.39	0.50	100.0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406	500	91	5	1,002
		40.52	49.90	9.08	0.50	100.0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199	569	213	21	1,002
		19.86	56.79	21.26	2.10	100.0
인종 정체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345	461	180	16	1,002
		34.43	46.01	17.96	1.60	100.0
	한국의 국적을 갖는 것	508	377	106	11	1,002
		50.70	37.62	10.58	1.10	100.0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49	490	233	30	1,002
		24.85	48.90	23.25	2.99	100.0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349	506	134	13	1,002
		34.83	50.50	13.37	1.30	100.0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313	451	214	24	1,002	
	31.24	45.01	21.36	2.40	100.0	

한국어 가능, 정치제도와 법 존중, 감정, 유창한 한국어 등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정체성과 출생, 국적, 거주, 전통, 조상 등 항목으로 구성된 인종정체성의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65, 0.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각 항목군이 각 정체성 변인의 개념적 구성요소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편, 세부 항목의 평균으로 측정된 각 정체성 변인은 전 연령대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 두 정체성 요인 모두 50대 이

상과 그 미만 세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인종정체성은 젊은 세대일수록 시민정체성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표 IV-2〉 참조). 전체적으로 두 요인은 짝자료 t-검정(paired t-test)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세대별 짝자료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난 40대 이하 세대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국가정체성 요인 중 인종정체성보다 시민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두 정체성의 중요도에 대해 의미 있는 구별을 하고 있지 않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이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통일 이후 통합 과정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합리적이라면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은 시민정체성에 더 주목하여 형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세대별 정체성 요인의 의미 있는 차이는 현재 40대 이하 북한 정치체제 관련 이질감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며, 통일 과정의 주축이 될 이들 세대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시민정체성 구성요소에 관한 동질성 회복이 통합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IV-2 연령별 국가정체성 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시민정체성		인종정체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 19세-만 29세	3.12	0.47	3.00	0.55
만 30세-만 39세	3.16	0.46	3.09	0.56
만 40세-만 49세	3.16	0.44	3.10	0.53
만 50세-만 59세	3.22	0.50	3.20	0.53
만 60세 이상	3.26	0.43	3.26	0.52
전체	3.19	0.46	3.14	0.54

한편, 세부 항목의 평균으로 측정한 각 정체성 변인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r=.71$ ), 국가정체성의 두 차원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가정체성 측정 모듈 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에서도 한 차원 요인만이 나타나 한국의 국가정체성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의 잠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드러냈다(〈표 IV-3〉 참조). 정기선·이선미(2011)의 2003년 KGSS 자료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구분에 의해 두 차원으로 접근해 왔고 경험적으로도 강한 인종정체성 차원과 상대적으로 약한 시민정체성 차원이 확인된 유럽중심 ISSP 23개국 조사 결과와는 뚜렷하게 대조된다.<sup>45)</sup>

한국 국가정체성이 다른 나라와 달리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한국이 동질적인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매우 드문 단일민족(mono-national) 국가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6)</sup>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민정체성 요소라도 단일민족 국가에서는 귀속적, 인종정체성 요소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황정미(2010)는 한국은 정치공동체와 종족공동체가 오랫동안 일치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는 이를 구분해내기 어렵다

<sup>45)</sup> 요인분석은 Jones와 Smith(2001)의 23개국 ISSP 조사자료 분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이들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요인분석과 배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취했다. 한편, ISSP 조사에서 스페인과 필리핀이 한국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요인분석에서 단일요인이 부각된 바 있다. Jones and Smith,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Patterns," pp. 52~54.

<sup>46)</sup>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Will Kymlicka, *Multicultural odysseys: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s of diversit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고 주장한 바 있다.<sup>47)</sup>

표 IV-3 국가정체성 요인분석: 요인적재 값(주성분분석 및 배리맥스 회전방법)

항목	요인 1	Uniqueness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0.691	0.523
한국의 국적을 갖는 것	0.691	0.522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0.711	0.494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665	0.557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0.649	0.579
한국의 정치체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552	0.695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609	0.629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0.705	0.503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0.659	0.565

### 다. 국가정체성 원천과 통일국가상 및 애국심에 대한 영향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 자체가 한국의 경우 특히, 경험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념상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또는 분석 편의상 국가정체성 구성요소 인식 측정 9개 항목 평균을 단일한 국가정체성으로 조작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2003년 ISSP 국가정체성 모듈 II를 이용 31개국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정체성 구성요소 선호도의 원천과 결과를 연구한 Kunovich(2009)에 의하면 선호도를 한 개 잠재요인으로 하는 확인요인분석 모델은 국가정체성 관련 가능한 한 많은 조건을 상정하여 타자를 배제하려는 ‘자격편중주의(credentialist)’ 관점을 가진 사람과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관념을 가진 ‘탈국민국가

47)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 (2010), p. 161.

(postnational)’ 관점을 가진 사람을 구분한다.<sup>48)</sup> 다시 말해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일차원적 접근도 한국을 넘어서는 이론적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적 논의의 경험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종정체성과 시민정체성의 두 차원으로 측정된 변인을 독립적으로 통제하여 다른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우선, 국가정체성 원천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사회경제 변수와 정치성향과 성격특성 변수가 단일차원으로서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해 보았다. <표 IV-4>는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사회경제 변수와 정당일체감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모델 1에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11점 척도, 0 매우 진보, 5 중도, 10 매우 보수), 성격특성 변수로 권위주의 성향과 Schwartz 기본가치 중 안전과 권력 등 개인 심리 기저에서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차례로 통제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sup>49)</sup>

<표 IV-4>에 의하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가정체성 인식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변수는 연령이다. 곧,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이가 들수록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조건을 상정하는 관점을

<sup>48)</sup> Kunovich,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p. 579.

<sup>49)</sup> 권위주의 성향은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묻는 7개 진술(①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②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③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⑤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⑥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쑥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⑦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을 이용하여 평균으로 측정했다. 또한, Schwartz 기본가치는 응답자가 “이 사람에게는 주변이 안전하여 위협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와 “이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권력)는 가치묘사 진술이 각각 어느 정도 자신의 경우와 비슷한지 6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측정했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의 크기도 다른 진보-보수 정치 성향변수나 성격 특성을 통제한 모델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예측한대로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할수록,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안전 가치를 선호할수록, 독립적으로 국가정체성을 일관되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서구 연구에서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권력 가치는<sup>50)</sup> 이번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정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을 가깝게 느끼는 응답자는 국가정체성 구성 요소에 대해 개방적 태도 곧, 낮은 자격편중주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거주지역 효과를 살펴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응답자는 국가정체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사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자격편중주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성별, 학력, 소득,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외 거주지역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단일차원 국가정체성 형성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서는 연령이, 그리고 정치성향과 성격특성 변인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 권위주의 성향, 안전 가치 선호 성향이 부각되었다.

<sup>50)</sup> Shalom H. Schwartz, Gian Vittorio Caprara, and Michele Vecchione, "Basic Personal Values, Core Political Values, and Voting: A Longitudin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31, no. 3 (2010), pp. 421~452.

표 IV-4 국가정체성과 성격특성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0.05*** (0.01)	0.04** (0.01)	0.04** (0.01)	0.04** (0.01)
여성	-0.01 (0.03)	-0.01 (0.03)	-0.01 (0.03)	-0.01 (0.03)
학력	-0.02 (0.03)	-0.02 (0.03)	-0.02 (0.03)	-0.02 (0.03)
가구소득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1)
서울	-0.14+ (0.08)	-0.14+ (0.08)	-0.13+ (0.08)	-0.16* (0.08)
인천/경기	0.05 (0.08)	0.05 (0.08)	0.06 (0.08)	0.06 (0.08)
대전/충청/세종	-0.02 (0.08)	-0.02 (0.08)	-0.00 (0.08)	-0.00 (0.08)
광주/전라	-0.06 (0.09)	-0.06 (0.09)	-0.06 (0.09)	-0.08 (0.09)
대구/경북	-0.01 (0.09)	-0.01 (0.09)	-0.02 (0.09)	-0.03 (0.08)
부산/울산/경남	0.15+ (0.08)	0.15+ (0.08)	0.15+ (0.08)	0.15+ (0.08)
민주	-0.08* (0.04)	-0.06+ (0.04)	-0.06+ (0.04)	-0.07+ (0.04)
한국	-0.04 (0.05)	-0.06 (0.05)	-0.06 (0.05)	-0.07 (0.05)
국민	-0.01 (0.08)	-0.01 (0.08)	-0.01 (0.08)	-0.01 (0.08)
바른	-0.07 (0.07)	-0.08 (0.07)	-0.08 (0.07)	-0.09 (0.07)
정의	0.04 (0.09)	0.06 (0.09)	0.08 (0.09)	0.06 (0.09)
정치이데올로기		0.02* (0.01)	0.02* (0.01)	0.02* (0.01)
권위주의			0.05+ (0.03)	0.05+ (0.03)
안전				0.03** (0.01)
권력				-0.02 (0.01)
상수	3.10*** (0.11)	3.03*** (0.11)	2.86*** (0.15)	2.80*** (0.16)
N	1001	1001	1001	1001
R-squared	0.066	0.071	0.074	0.082

+ p<0.10, \* p<0.05, \*\* p<0.01, \*\*\* p<0.001



그렇다면, 국가정체성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통일 이후 국가상에 대한 다양한 관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현재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용인할 수 있는 통일국가 정체성 범위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국가정체성의 두 차원인 시민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을 독립적으로 통제하여 통일국가상을 뒷받침하는 국가정체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경험적 분석모델은 ①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단일민족), ②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혈통), ③ 통일국가에서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사상 자유), ④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공동체 우선), ⑤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집회 자유), ⑥ 통일국가에서는 소수 집단(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소수집단), ⑦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북한 제도), ⑧ 통일 이후 북한의 역사나 북한 교과서의 내용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북한 교과)는 등의 통일국가정체성 관련 8개 규범적 주장을 제시하고 등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조작하고, 시민정체성과 인종정체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사회경제 변수와 정당일체감, 그리고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를 통제하여 구축했다(〈표 IV-5〉 참조).

〈표 IV-5〉는 통일국가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데, 우선 시민정체성은 예상대로 민족과 공동체 중심의 통일국가상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반면, 인종정체성은 이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력도 시민정체성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민정체성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통일국가가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한다’,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이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추는 반면에 인종정체성은 이에 대한 동의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회귀계수 절댓값의 크기도 일관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정체성은 소수집단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동의하거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까지 허용하는 제한 없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동의로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않으며 북한제도와 북한교과서를 수용하는 관용 태도까지도 동의하게 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정체성이 집회나 선전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통일국가상에 대한 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종정체성은 이를 지지하게 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두 정체성 요인이 경험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분리하기 쉽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민정체성이 소수집단, 북한제도, 북한교과 모델 분석 결과에서처럼 통일국가 정체성의 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추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현재 한국 국가정체성 중 시민정체성 요인 선호가 민족과 집단 중심의 통일국가상에 대한 낮은 지지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관념을 지지하게 하는 데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정체성 요인이 예측한 대로 통일국가상 관련 주장에 대해 지지와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단일민족, 혈통, 공동체우선 모델 등)에도 인종정체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어 서구 국가정체성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이의 상대적 중요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5 국가정체성과 통일국가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일민족	혈통	사상자유	공동체우선	집회자유	소수집단	북한제도	북한교과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시민정체성	-0.15*	-0.17*	-0.03	-0.25***	-0.11	0.10	-0.11	0.06
	(0.07)	(0.07)	(0.08)	(0.07)	(0.07)	(0.07)	(0.07)	(0.07)
인종정체성	0.34***	0.33***	0.09	0.29***	0.12*	-0.07	0.05	-0.07
	(0.06)	(0.06)	(0.07)	(0.06)	(0.06)	(0.06)	(0.06)	(0.06)
연령	0.03+	0.00	-0.00	0.01	0.00	0.02	0.01	-0.00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여성	-0.05	-0.02	-0.06	-0.06	-0.03	0.02	-0.05	-0.03
	(0.04)	(0.05)	(0.05)	(0.05)	(0.05)	(0.04)	(0.05)	(0.05)
학력	0.02	-0.04	0.02	-0.03	0.07+	0.07+	-0.01	-0.00
	(0.04)	(0.04)	(0.05)	(0.04)	(0.04)	(0.04)	(0.04)	(0.04)
소득	0.00	-0.02	0.04+	0.01	0.01	0.01	0.06**	0.04+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서울	0.16	-0.15	-0.18	-0.02	0.27*	0.53***	0.23+	0.30*
	(0.12)	(0.12)	(0.14)	(0.13)	(0.13)	(0.12)	(0.13)	(0.13)
인천/경기	-0.04	-0.34**	-0.20	0.02	-0.03	0.23*	-0.02	0.12
	(0.12)	(0.12)	(0.14)	(0.12)	(0.12)	(0.11)	(0.12)	(0.13)
대전/충청/세종	-0.02	-0.21	-0.15	0.06	-0.03	0.24+	0.03	0.21
	(0.13)	(0.13)	(0.15)	(0.13)	(0.14)	(0.12)	(0.14)	(0.14)
광주/전라	0.15	-0.37**	-0.24	-0.17	-0.11	0.37**	0.02	0.04
	(0.13)	(0.13)	(0.15)	(0.14)	(0.14)	(0.13)	(0.14)	(0.14)
대구/경북	-0.14	-0.03	-0.18	0.03	-0.10	0.24+	-0.23+	-0.04
	(0.13)	(0.13)	(0.15)	(0.14)	(0.14)	(0.13)	(0.14)	(0.14)
부산/울산/경남	-0.14	-0.10	0.05	0.12	0.02	0.45***	0.03	0.21
	(0.12)	(0.13)	(0.14)	(0.13)	(0.13)	(0.12)	(0.13)	(0.13)
민주	0.13*	0.05	0.11+	0.05	0.28***	0.12*	0.02	0.10
	(0.06)	(0.06)	(0.06)	(0.06)	(0.06)	(0.05)	(0.06)	(0.06)
한국	0.16*	0.02	0.10	0.05	0.12	-0.01	0.01	-0.05
	(0.07)	(0.08)	(0.09)	(0.08)	(0.08)	(0.07)	(0.08)	(0.08)
국민	0.33**	0.03	0.20	0.23+	0.32**	0.29**	0.10	-0.10
	(0.12)	(0.12)	(0.14)	(0.12)	(0.12)	(0.11)	(0.13)	(0.13)
바른	0.15	-0.11	0.09	0.22*	0.15	0.02	0.07	-0.12
	(0.10)	(0.11)	(0.12)	(0.11)	(0.11)	(0.10)	(0.11)	(0.12)
정의	-0.21	-0.05	0.27+	-0.03	0.27+	0.19	0.39**	0.25
	(0.14)	(0.14)	(0.16)	(0.15)	(0.15)	(0.13)	(0.15)	(0.15)
이념	-0.03*	0.02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상수	2.08***	2.03***	2.07***	2.34***	2.40***	2.22***	2.42***	2.30***
	(0.23)	(0.24)	(0.27)	(0.24)	(0.24)	(0.22)	(0.25)	(0.25)
N	1001	1001	1001	1001	1001	1001	1001	1001
R-squared	0.084	0.080	0.030	0.050	0.064	0.065	0.056	0.045

+ p<0.10, \* p<0.05, \*\* p<0.01, \*\*\* p<0.001

이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간의 관계를 애국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변수와 정치성향을 통제한 다중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살펴볼 도록 하자. 국가정체성의 심리적 귀결 내지는 ‘정치화된 집단 의식’으로서 애국심은 현재 한국사회와 국가통합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심리 변인 중 하나이며 선행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국가정체성과 함께 민족주의와 개념적으로 경험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sup>51)</sup>

개념적으로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모두 특정 실체에 대한 사랑과 동일시,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내포한다. 다만 애국심은 정치공동체로서 ‘나라(patria 곧 country)’가, 민족주의는 인종문화적 의미의 ‘민족국가(natio 곧 nation)’가 그 대상인 것이다.<sup>52)</sup> 이와 같은 이념형적 구분은 우선 시민정체성과 애국심 간의 정적 관계를, 그리고 인종정체성과 민족주의 간의 정적 관계를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나라와 민족국가 간의 개념 구분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 없을 정도로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애국심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접근하는가에 두 정체성 요인과의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ANES)에 바탕을 둔 선행연구에 의하면 애국심은 크게 보아 ‘상징적 애국심(symbolic patriotism)’, ‘무비판적 애국심(uncritical patriotism)’, ‘건설적 애

<sup>51)</sup> Leonie Huddy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pp. 63~77; Sonia Roccas, Shalom H. Schwartz and Adi Amit, “Personal Value Priorities and National Identifica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31, no. 3 (2010), pp. 393~419; Sonia Roccas and Andrey Elster, “Group Identitie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ed. Linda R. Trop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06~122.

<sup>52)</sup> Igor Primoratz, “Patriot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pril 26, 2017), ed. Edward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7/entries/patriotism/>> (검색일: 2017.10.11.).

국심(constructive patriotism), ‘국가자부심(national pride)’, ‘국가애착심(national attachment)’ 등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된다.<sup>53)</sup> 상징적 애국심은 국기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정의되며, 무비판적 또는 맹목적(blind)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비판을 꺼리거나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건설적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비판적 충성심과 긍정적 변화에 대한 바람에 기초한 애착심으로 개념화된다. 국가자부심은 나라의 정치체제, 경제업적, 역사 등에 대한 자부심으로 측정된다. 국가애착심은 국가에 대한 내재화된 소속감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사회정체성 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화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으로도 명명되기도 한다.<sup>54)</sup> 애국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에 따른 측정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예컨대 상징적 애국심과 무비판적 애국심은 역사적으로 보수 정치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설적 애국심은 변화에 대한 긍정으로 진보 정치성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으로 애국심을 측정했다. 첫째, 상징적 애국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태극기)를 “매우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은 편이다, 아무 느낌이 없다, 기분이 나쁘다, 매우 기분이 나쁘다”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둘째, 맹목적 애국심을 가늠하기 위하여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는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모욕감)를, 셋째, 국가자부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진술에 동의 정도(역사자부심)를, 넷째, 애착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나는 한국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낀다”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애착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

<sup>53)</sup> 본 연구에서는 애국심과 애국주의가 상호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상정한다.

<sup>54)</sup> Huddy and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pp. 63~77.

체성에 바탕을 둔 국가애착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중요하다”(한국인 중요)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했다.

〈표 IV-6〉은 국가정체성의 두 차원인 시민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이 5가지 차원의 애국심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사회경제변수와 정당일체감과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 등의 정치성향변수를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예상대로 시민정체성은 민족 또는 역사보다는 정치공동체의 상징인 국가에 대한 상징적 애국심을 독립적으로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고 인종정체성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념을 부각시키지 않고 국가애착심을 측정한 경우(애착심) 시민정체성만이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중요하다”라는 질문으로 자기개념을 두드러지게 한 경우 자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정체로서 국가정체(한국인중요)는 시민정체성보다는 인종정체성에 의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핵심 차원은 인종정체성임을 확인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로 두 정체성 요인이 독립적으로 통계상 의미 있는 수준에서 맹목적 애국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모욕감), 맹목적 애국심과 두 정체성 요인 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정체성의 어떤 차원이든 모두 강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비판적 애국심 측정에 ‘개인적’이라는 자기개념을 부각시키는 자구가 포함되어 두 정체성 차원 모두 자기개념에 중요한 사회정체를 이루므로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곧 한국인중요와 함께 사회정체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연령은 다양한 차원으로 측정한 애국심의 모든 모델에서 독립적으로 애국심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애국심 측정에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이데올로기는 정체성 요인과 다른 통제변수

를 통제한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비록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애국심이라도 경험적 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애국심에 관한 진보-보수 정치성향 보다는 국가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탄핵 국면에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진보-보수 혹은 세대 간 갈등이 상징적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났었는데 비록 연령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태극기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의 효과는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지지자 못지않게 태극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만큼 극심한 갈등의 상징이 되고 있거나 국가상징이 특정 정파의 상징으로 전유 또는 정치화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참고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때 매우 기분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이고 기분이 좋은 편이 57.1%인 반면 기분이 나쁘다는 응답과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각각 1.8%, 0.4%로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나 전체적으로 태극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봐도 5점 만점에 3.75(20대), 3.68(30대), 3.84(40대), 4.00(50대), 4.05(60대 이상)로 전 연령세대 모두 “기분이 좋은 편”이라는 쪽에 가깝게 응답하고 있다.

표 IV-6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태극기	모욕감	역사자부심	애착심	한국인중요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시민정체성	0.17* (0.07)	0.18* (0.07)	0.04 (0.07)	0.22** (0.07)	0.09 (0.06)
인종정체성	0.09 (0.06)	0.11+ (0.06)	0.18** (0.06)	0.09 (0.06)	0.18*** (0.05)
연령	0.06***	0.04+	0.05**	0.07***	0.06**

	태극기	모욕감	역사자부심	애착심	한국인중요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여성	0.02	-0.03	-0.02	-0.01	-0.04
	(0.04)	(0.05)	(0.04)	(0.05)	(0.04)
학력	0.00	-0.00	0.02	-0.02	0.02
	(0.04)	(0.04)	(0.04)	(0.04)	(0.04)
가구소득	-0.01	-0.00	-0.03+	0.00	-0.02
	(0.02)	(0.02)	(0.02)	(0.02)	(0.02)
서울	-0.07	-0.06	-0.22+	-0.08	-0.20+
	(0.12)	(0.12)	(0.12)	(0.13)	(0.11)
인천/경기	-0.08	-0.08	-0.17	-0.22+	-0.13
	(0.11)	(0.12)	(0.12)	(0.12)	(0.11)
대전/충청/세종	0.08	-0.25+	-0.04	-0.07	-0.14
	(0.13)	(0.13)	(0.13)	(0.13)	(0.12)
광주/전라	-0.16	-0.18	0.05	-0.21	-0.15
	(0.13)	(0.13)	(0.13)	(0.14)	(0.12)
대구/경북	0.00	-0.08	-0.05	-0.08	-0.04
	(0.13)	(0.13)	(0.13)	(0.13)	(0.12)
부산/울산/경남	0.03	0.00	-0.02	0.01	0.02
	(0.12)	(0.13)	(0.12)	(0.13)	(0.11)
민주	0.17**	-0.06	-0.05	0.05	-0.03
	(0.05)	(0.06)	(0.05)	(0.06)	(0.05)
한국	0.14+	-0.08	-0.22**	-0.04	-0.11
	(0.07)	(0.08)	(0.07)	(0.08)	(0.07)
국민	0.11	0.03	-0.03	-0.05	0.19+
	(0.12)	(0.12)	(0.12)	(0.12)	(0.11)
바른	0.20+	0.12	0.25*	0.21+	0.15
	(0.10)	(0.11)	(0.10)	(0.11)	(0.10)
정의	-0.26+	0.09	0.05	0.20	0.08
	(0.14)	(0.14)	(0.14)	(0.14)	(0.13)
이념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상수	2.76***	2.04***	2.34***	1.88***	2.16***
	(0.23)	(0.24)	(0.23)	(0.24)	(0.21)
N	1001	1001	1001	1001	1001
R-sqr	0.094	0.062	0.084	0.083	0.092

+ p<0.10, \* p<0.05, \*\* p<0.01, \*\*\* p<0.001



## 2. 사회적 거리감과 국가정체성

### 가. 사회적 거리감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Borgadus social distance) 척도는 현존하는 태도측정 도구 중 가장 오래된 설문항으로서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유형의 사회집단-소수민족 및 인종집단, 성적 소수자, 장애인, 특정 질환자, 성적 소수자, 직업 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는데 쓰여 왔다. 보가더스 척도는 다인종·다문화 사회 경험이 축적된 미국에서 항목 간 순위 위계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곧 보가더스 척도는 미국인들이 결혼-친구-직장 동료-이웃-지인-국민-방문객의 순으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일련의 사회적 거리감 측정 항목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40여 년간 경험적 타당화 작업을 거친 편견 측정도구이다.<sup>55)</sup>

보가더스는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집단에 대해 결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의 7가지 항목에서 받아들일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응답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7개 항목은 각각 위계적인 차이와 순서를 갖는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로 구성되어, 상위항목에 찬성한다면 그 하위 항목들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다시 말해서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는 항목부터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항목까지를 1부터 7점까지의 거리감으로 환산하고, 문항 간의 위계적이고 단계적인 관계와 각 문항의 누적성을 전제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다.<sup>56)</sup>

<sup>55)</sup> 김석호 외,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제36권 1호 (2013), pp. 1~20.

이 장에서는 최근 국내 이주자 집단 중 그 수와 정치사회적 함의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한족),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중동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국민, 직장동료, 가까운 이웃, 절친한 친구, 자녀 배우자, 내 배우자 등의 7개 항목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국가정체성 그리고 북한 및 대북정책 태도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했다.

우선 선행연구에 따라 응답자 답변에 일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 배우자, 자녀 배우자, 절친한 친구, 가까운 이웃, 직장동료, 국민, 방문 순으로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을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하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한 찬성을 해당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 점수로 조작했다(〈표 IV-7〉 참조).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자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평균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한족), 중국동포, 중동인, 아프리카인 순으로 거리감을 보였다. 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이주자 집단으로, 일본인을 그 다음으로 가깝게 느끼는 이주자 집단으로 평가한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sup>57)</sup> 표준편차로 보건대도 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선호의 차이도 다른 이주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미국 국민에 대한 선호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호는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시민 및 인종 정체성 고려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56) 이명진·최유정·최셋별, “연구논문: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권 1호 (2010), pp. 63~85.

57) 이명진·최유정·최셋별, 위의 글, pp. 63~85;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권 2호 (2013), pp. 29~63.

한편, 중국동포와 중국인(한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연구에서 두 집단 중 중국동포는 일본인과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sup>58)</sup> 이번 조사에서는 동남아시아 인보다도 거리감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에 대한 상대적 거리감이 커진 것과 중국동포와 한족에 대한 거리감이 비슷하게 드러난 사실이 인종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체성이 다소 희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관계의 악화를 반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처음 측정된 중동인과 아프리카인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은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편견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7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보가더스 척도

이주자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거리감 순위
북한이탈주민	965	3.24	1.68	2
중국동포	919	3.74	1.89	6
중국인(한족)	924	3.68	1.87	5
일본인	950	3.28	1.92	3
동남아시아인	976	3.59	1.76	4
미국인	992	2.74	1.67	1
아프리카인	965	4.06	1.84	8
중동인	938	4.04	1.86	7

구체적으로 보가더스 각 항목에 대한 찬성 응답자 수를 들여다보아도 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호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른 이주자 집단에 비해 두 이주자 집단에 대해서는 내 배우자, 자녀 배우자, 절친한 친구, 가까운 이웃 등에 대한 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IV-8〉)

58) 윤광일, 위익글, pp. 29~63.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인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많았지만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찬성의 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중국동포에 대한 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복합적인 접근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8 보가더스 척도 각 항목 찬성 응답자 수

(단위: 명)

항목	북한 이탈주민	중국 동포	중국인 (한족)	일본인	동남 아시아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중동인
방문	939	882	893	930	966	990	958	933
국민	841	604	536	526	516	614	445	423
직장동료	787	679	677	730	777	873	677	677
가까운 이웃	767	622	626	708	711	858	616	596
절친한 친구	599	478	487	587	558	755	475	443
자녀 배우자	241	167	191	286	167	395	104	112
내 배우자	224	159	161	242	159	324	97	102

대응분석은 탐색적 분석법으로 다차원의 범주형 변수로 구성된 자료를 한두 개의 차원으로 요약, 시각화하여 준다. 대응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변수의 이산형 범주가 얼마나 가까운지 곧,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IV-1>은 보가더스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감의 항목들과 이주자 집단의 범주 간의 경험적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대응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가더스 척도 변수의 항목과 이주자 집단 변수의 범주가 가까운 위치에 놓일수록 응답자들이 두 변수의 각 항목을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새터민은 국민 항목과 가까이 있으며, 미국인은 국민 항목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배우자 항목에 근접해 있고 일본인은 친구 항목에 근접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 항목에는 가깝지만 배우자 항목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집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복합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 중동인과 아프리카인은 방문 정도만 허용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새터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상대적으로 거리낌이 적지만 이들을 직장동료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응답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이라는 추상적 범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직장동료와 이웃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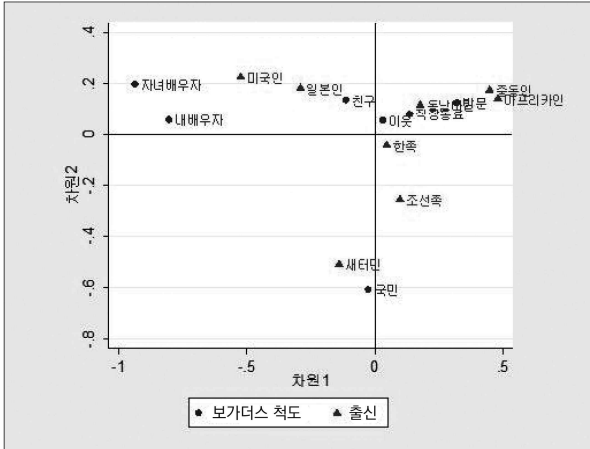
한편, 보가더스 척도와 이주자 집단의 변수는 대응분석에 의해 두 개의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체 자료 대부분인 72.7%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차원에서 보면 국민 위치가 방문 항목 왼쪽에 놓일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과는 달리 중간 정도에 놓여 보가더스 척도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에서의 순서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보가더스 척도의 서구적 편향과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강화한다.<sup>59)</sup> 곧 한국인에게 ‘국민’의 지위는 서구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가 먼 개념이 아니다. 한국인은 새터민이나 조선족과 같이 최소한 역사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공유한 이주자 집단만이 같은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중국동포에게 특히 전자에게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여타 이주자 집단과는 달리 거부감이 작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2007년 자료 이래 지속해서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적어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정책이 인종정체성에

59) 이명진·최유정·최셋별, “연구논문: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pp. 63~85; 정기선·이선미, “기획특집: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pp. 45~72;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pp. 29~63.

있어서 이질적인 이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보다는 한국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두 집단 모두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웃 또는 직장 동료, 나아가 본인과 자녀의 배우자로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통합 정책 수립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IV-1 보가더스 척도와 이주자 집단 간 행렬도(biplot)



### 나. 사회적 거리감과 국가정체성

그렇다면 국가정체성의 두 차원인 시민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이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 국내 이주자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표 IV-9>는 시민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한족),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중동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사회경제변수와 정당일체감과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 등 정치성향, 그리고 권위주의 성향과 Schwartz 상위차원 기본가치 등 성격특성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모델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종정체성 요인에 대한 증시는 조선족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체성 구성요소 중 이주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요인을 증시하는 태도가 이주자 집단에 대한 거리감을 높이는 것은 예측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같은 혈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이질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체제를 이탈한 북한 주민에게도 인종적 정체성의 부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더 크리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이 매우 지난한 과정일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참고로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지는 않았으나 같은 혈통이라는 사실이 이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중국 동포에 대한 이질감도 낮지 않음이 드러났다. 시민정체성은 중동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정체성이 아프리카인과 함께 응답자들이 가장 멀리 느끼는 중동인에 대한 거리감을 낮추는 것은 국가정체성 구성요소 중 개인이 선택 가능한 요인의 의미 있는 영향력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국가정체성 요인으로 인종정체성이 시민정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며 이는 같은 혈통인 북한 주민과 중국 동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민정체성은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을 통한 국가통합 과정에서 이를 고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변수 중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은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은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한족 그리고 동남아시아인 등에 대해 남성보다 더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는데 소수집단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성차는 이전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났던 사실이다.<sup>60)</sup> 기득권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회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편견이 높다는 경험적 연구에 배치되는 결과로 그 이유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체로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사회적 거리감을 독립적으로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보수 정치성향은 아프리카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치성향이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치성향이 서구와 달리 사회경제적 쟁점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나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권위주의 성향은 한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주자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권위주의 성향이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관계의사를 나타낸다는 민경환(1989)<sup>61)</sup>의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또 다른 성격특성으로 Schwartz 기본가치 중 보편주의를 포괄하는 상위차원 가치로서 자기초월은 북한이탈주민과 한족을 제외하고는 이주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고, 권력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차원 가치로서 자기 고양은 북한이탈주민과 중국동포 그리고 아프리카인에 대한

60) 김혜숙,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제 및 사회문제』, 제6권 2호(2000), pp. 115~134;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2002), pp. 35~50;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4호(2007), pp. 91~104.

61)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2호(1989), pp. 146~168.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편주의가 소수집단에 대한 호감과 신뢰적 태도와 상관성이 있고 권력 가치는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김혜숙(2002, 2007)의 연구 결과에 일치한다. 상위차원 기본가치로서 보수는 이주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대체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방성은 일관되게 이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sup>62)</sup> 요컨대 보수 정치성향과 권위주의 성향 그리고 자기고양 가치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이주자 집단 중 소수집단으로 판단되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독립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성향과 성격특성은 변화시키기 매우 어렵고 이를 위한 정책적 처방도 도덕적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을 통한 국가통합을 위해서는 보편주의와 개방성 가치를 고취시키고 권력 가치와 권위주의를 지양하는 교육이 특히 가치형성기인 청소년 시기 이전에 필요해 보인다.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정이나 평등과 같은 보편주의를 신봉하는 경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자유나 개인 성취와 같은 자기고양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보편주의와 개방성 가치의 고취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sup>63)</sup>

62) 김혜숙(2011)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권력과 같은 권위주의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보편주의 가치도 예상과 달리 부정적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2011), p. 79.

63)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pp. 91~104.

표 IV-9 국가정체성과 성격특성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조선족	한족	일본인	동남아	미국인	아프리카	중동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시민정체성	-0.22 (0.16)	-0.02 (0.19)	0.06 (0.18)	0.18 (0.18)	0.08 (0.16)	-0.12 (0.16)	-0.22 (0.17)	-0.40* (0.18)
인종정체성	0.28* (0.14)	0.20 (0.16)	0.52*** (0.15)	0.34* (0.15)	0.30* (0.14)	0.40** (0.13)	0.59*** (0.15)	0.80*** (0.15)
연령	-0.00 (0.05)	-0.02 (0.05)	0.00 (0.05)	-0.03 (0.05)	-0.02 (0.05)	0.10* (0.04)	0.04 (0.05)	-0.04 (0.05)
여성	0.36*** (0.10)	0.23+ (0.12)	0.24* (0.12)	0.19 (0.12)	0.22* (0.10)	0.14 (0.10)	0.13 (0.11)	0.17 (0.11)
학력	0.12 (0.09)	0.05 (0.11)	0.11 (0.11)	-0.10 (0.11)	-0.08 (0.09)	-0.08 (0.09)	-0.14 (0.10)	-0.06 (0.10)
가구소득	0.00 (0.04)	0.03 (0.05)	-0.02 (0.05)	-0.05 (0.05)	-0.05 (0.04)	-0.03 (0.04)	0.00 (0.05)	-0.02 (0.05)
서울	0.76** (0.28)	1.05** (0.32)	1.07*** (0.32)	0.37 (0.32)	1.00*** (0.28)	0.43 (0.28)	1.24*** (0.30)	0.97** (0.31)
인천/경기	0.60* (0.27)	1.03** (0.31)	0.50 (0.31)	0.54+ (0.31)	1.00*** (0.27)	0.39 (0.27)	0.97*** (0.29)	0.45 (0.30)
대전/충청/세종	0.41 (0.30)	0.68* (0.35)	0.45 (0.34)	0.48 (0.34)	0.89** (0.30)	0.60* (0.29)	1.26*** (0.32)	0.86* (0.33)
광주/전라	1.34*** (0.30)	1.88*** (0.36)	1.42*** (0.35)	1.77*** (0.35)	2.04*** (0.31)	1.20*** (0.30)	1.86*** (0.33)	1.47*** (0.34)
대구/경북	1.54*** (0.30)	2.11*** (0.35)	1.76*** (0.34)	1.66*** (0.34)	2.46*** (0.30)	1.56*** (0.29)	2.12*** (0.32)	1.72*** (0.34)
부산/울산/경남	1.18*** (0.28)	1.28*** (0.33)	0.48 (0.32)	0.44 (0.32)	1.31*** (0.29)	0.77** (0.28)	1.17*** (0.30)	0.70* (0.31)
민주	-0.12 (0.13)	0.12 (0.15)	0.01 (0.15)	-0.18 (0.15)	0.00 (0.13)	0.12 (0.13)	0.18 (0.14)	0.28+ (0.14)
한국	-0.10 (0.17)	-0.00 (0.20)	0.18 (0.19)	0.22 (0.19)	0.25 (0.17)	0.08 (0.17)	-0.02 (0.18)	0.04 (0.19)
국민	-0.18 (0.28)	0.05 (0.32)	-0.30 (0.32)	0.06 (0.31)	-0.05 (0.28)	-0.07 (0.27)	0.19 (0.29)	0.31 (0.30)
바른	-0.07 (0.25)	0.44 (0.29)	0.53+ (0.28)	0.31 (0.28)	0.32 (0.25)	0.34 (0.24)	0.30 (0.26)	0.24 (0.27)
정의	-0.37 (0.33)	-0.14 (0.39)	-0.13 (0.38)	-0.12 (0.37)	-0.18 (0.34)	-0.06 (0.33)	0.12 (0.35)	0.14 (0.37)
이념	0.08** (0.03)	0.04 (0.03)	0.05 (0.03)	0.03 (0.03)	0.00 (0.03)	0.03 (0.03)	0.08* (0.03)	0.05 (0.03)
권위주의	0.24** (0.09)	0.26* (0.11)	0.15 (0.11)	0.26* (0.11)	0.30** (0.09)	0.18+ (0.09)	0.47*** (0.10)	0.44*** (0.10)
자기초월	-0.14 (0.08)	-0.22* (0.10)	-0.15 (0.10)	-0.23* (0.10)	-0.09 (0.09)	-0.22** (0.08)	-0.22* (0.09)	-0.33*** (0.09)

	새터민	조선족	한족	일본인	동남아	미국인	아프리카	중동인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자기교양	0.19* (0.08)	0.23* (0.10)	0.15 (0.10)	-0.15 (0.09)	0.11 (0.08)	-0.04 (0.08)	0.19* (0.09)	0.15 (0.09)
개방성	-0.25*** (0.07)	-0.28*** (0.08)	-0.23** (0.08)	-0.19* (0.08)	-0.28*** (0.07)	-0.11+ (0.07)	-0.23** (0.07)	-0.26*** (0.08)
보수	-0.07 (0.08)	-0.15 (0.10)	-0.02 (0.10)	-0.00 (0.10)	0.03 (0.09)	0.14+ (0.08)	0.08 (0.09)	0.09 (0.09)
상수	1.62* (0.67)	2.21** (0.79)	0.87 (0.78)	2.51** (0.77)	1.23+ (0.68)	1.17+ (0.66)	0.39 (0.72)	1.70* (0.75)
N	964	918	923	949	975	991	964	937
R-squared	0.133	0.123	0.127	0.169	0.187	0.149	0.169	0.166

### 3.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 가. 가치

개인에게 가치는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신념으로, 여러 가능한 행동 양식, 수단 및 목적 중 무엇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sup>64)</sup> 어떠한 행동 양식이나 최종 상태(end-state)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될 만한가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이자,<sup>65)</sup> 사회적 행위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상황을 초월하여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는 목표들이다.<sup>66)</sup>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개인의 욕구, 사회적 상호작용 조정의 필요, 집단의 생존과 복지 필요 등과 같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보편적 요건이 있는데, 가치는 이와 관

<sup>64)</sup> Clyde Kluckhohn,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eds. T. Parsons and E. Shil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참조.

<sup>65)</sup>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참조.

<sup>66)</sup> Shalom H.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 Mark Zanna (Orlando: Academic Press, 1992), pp. 1~65.

련된 동기를 표현한다.<sup>67)</sup> 가치는 또한 인지적·동기적 구성물(construct)로 성향 특성(dispositional trait)과 함께 생태적(biological) 성격 요소를 구성한다. McAdams와 Pals(2006)는 가치를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역할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발현되는 ‘특성 적응(characteristic adaptations)’의 예로 들면서 상황과 시간을 초월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드러나는 개인 차 성격 변인인 성향 특성과 구분한다.<sup>68)</sup> 한편, 가치는 그 기저에 있는 욕구나 동기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이 있고, 인지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의사소통에 쉽게 쓰인다.<sup>69)</sup>

대체로 심리학에서의 가치 연구는 우선 가치의 심리 과정상 기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기능적으로 가치는 자신과 타인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 데 쓰이는 원칙이자 기준이다. 가치는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안정적인 신념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가치 연구는 또한 거시적으로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 유사성과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심리적 차이의 근원을 밝혀내는 경험적 비교문화연구로 진화해왔으며, 특히 Schwartz 이후 대규모 다국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보편적 가치내용과 구조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비교문화 심리학의 분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서 Schwartz와 동료의 후속 연구는 기존 가치 연구의 가치 측정 및 분석 수준을 거시 문화 차원에서 개

67) Shalom H. Schwartz and Wolfgang Bilsky,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no. 3 (1987), p. 551.

68) D. P. McAdams and J. L. Pals, "A New Big Five: Fundamental Principles for an Integrative Science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3 (2006), pp. 208~209.

69) Wolfgang Bilsky and Shalom H. Schwartz, "Measuring motivations: Integrating content and meth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4, no. 8 (2008), pp. 1738~1751.

인 차원으로 바꾸었고 다양한 문화권에 모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유형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했다.<sup>70)</sup>

Schwartz(1992)는 선형적(a priori) 이론화 작업을 통해 개별 가치가 추구하는 동기적 목표에 따라 구분되는 일련의 인간 기본가치(basic value)가 존재하며 이들 가치는 서로 양립하거나 충돌하는 동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sup>71)</sup> 그는 이러한 관계를 특정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의 구조로 명명한다. Ciecuch와 동료들(2015)에 의하면, 가치는 성향 특성과 함께 성격 요소로서 인간생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 구조나 성격 요인 구조가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up>72)</sup> 한편, 가치의 본질과 구조는 보편적일지라도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른 가치의 우선순위 또는 위계가 존재한다.<sup>73)</sup> 이와 같은 가치의 보편성과 문화 특수성은 최근 신경과학의 뇌연구에서도 그 근거가 밝혀지고 있다.<sup>74)</sup>

Schwartz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나라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표본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다국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기본 개인가치 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Schwartz는 어느 문화권이든 내재적 동기에 의해 구분되며 서로 양립하거나 대립하는 또는 독립적인 관계가 있는 10개의 기본가치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10개

---

70)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pp. 1~16.

71)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pp. 1~65.

72) Jan Ciecuch, Shalom H. Schwartz, and Eldad Davidov, “The Social Psychology of Value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ed. Wright J. D. (Oxford: Elsevier, 2015), p. 45.

73)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pp. 1~65.

74) Tobias Brosch and David Sander, “Comment: The Appraising Brain: Towards a Neuro-Cognitive Model of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Emotion Review*, vol. 5, no. 2 (2013), pp. 163~168.

의 기본가치는 자기주도(self-direction), 자극(stimulation), 쾌락(hedonism),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 안전(security), 동조(conformity), 전통(tradition), 박애(benevolence), 보편주의(universalism)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정의와 대표적인 세부 가치 항목은 <표 IV-10>과 같다.<sup>75)</sup>

표 IV-10 기본가치의 개념적 정의와 하위유형\*

기본가치	정의	대표적 가치항목
1. 안전(Security)	자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 사회의 안전, 조화, 그리고 안정	가족의 안전, 나라의 안전, 사회질서, 소속감, 건강한, 청결한, 호의에 보답
2. 동조(Conformity)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성향, 및 충동의 자제	순종하는, 부모와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공손, 자기수양
3. 전통(Tradition)	전통문화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 및 아이디어의 존중, 수용, 이행	전통에 대한 공경, 중립적인, 겸손한, 인생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는, 헌신적인
4. 박애(Benevolence)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 보존과 향상	영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성숙한 사랑, 참된 우정, 충성스러운, 용서하는, 도움이 되는, 정직한, 책임감 있는
5. 보편주의(Universalism)	인류와 자연 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인식, 관용, 보호	평등, 내적조화, 세계평화, 자연과의 조화, 지혜, 아름다운 세상, 사회정의, 관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6. 자율(Self-direction)	선택, 창조, 탐색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사고 및 행위	자유, 자존감, 프라이버시, 창의성,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적인, 호기심 있는

<sup>75)</sup> Schwartz는 이후 작업에서 자기주도 가치를 사고와 행위로, 동조를 규칙과 대인관계로, 박애를 돌봄과 의존으로, 보편주의를 자연, 배려, 관용으로 나누고 체면(face)과 겸양(humility)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여 기본가치를 19개로 세분해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Shalom H. Schwartz, "The Refined Theory of Basic Values," in *Values and Behavior: Taking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eds. S. Roccas and L. Sagiv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참조.

기본가치	정의	대표적 가치항목
7. 자극(Stimulation)	흥분, 신기로움, 도전	다채로운 삶, 재미있는 삶, 대범한
8. 쾌락(Hedonism)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쾌락, 즐기는 삶, 방종한
9. 성취(Achievement)	사회기준에 따라 드러나는 유능함을 통한 개인적 성공	영향력 있는, 야심적인, 유능한, 지적인, 성공적인
10. 권력(Power)	사회적 지위와 위신, 통제력, 또는 사람과 자원에 미치는 지배력	사회적 힘, 부, 권위, 사회적 인정, 체면을 유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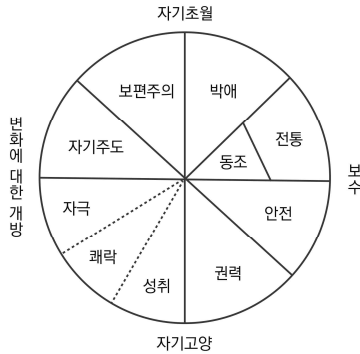
\*김연신·최한나(2009) 표 1과 Schwartz *et al.*(2012) Table 1을 통해 재구성

10개의 개인 기본가치는 가치 간의 관계가 양립가능한지 대립적인지, 가치추구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그리고 불안 회피와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한 것인지 또는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확장(self-expansion)과 성장을 위한 것인지와 같은 3가지 요인에 의해 보편적 가치구조에서 위치가 결정된다.<sup>76)</sup> Schwartz는 <그림 IV-2>와 같은 원을 이용하여 기본가치의 위치가 반영된 어느 사회나 나타나는 보편적 가치구조를 설명한다. 개별 가치는 원에서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동기 측면에서 관계가 없거나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것을 나타내고 자기초월, 자기고양,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보수주의 등과 같이 원 밖에 놓인 4개의 상위차원(higher order) 가치에 의해 분류된다. 다만 쾌락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이라는 2개의 상위차원 가치의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점선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각각의 가치는 표현하는 동기에 따라 개념적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동기적 연속선(motivational continuum) 상에 놓여 있다.<sup>77)</sup>

<sup>76)</sup> *Ibid.*

<sup>77)</sup> Schwartz *et al.*, "Basic Personal Values, Core Political Values, and Voting: A Longitudinal Analysis," pp. 421~452.

그림 IV-2 Schwartz의 동기에 따른 10개 기본가치와 4개의 상위차원 가치구조



이 장에서는 가치가 삶의 원칙으로서 대상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된 이론적 명제가 정치심리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Schwartz가 제시한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적 선호와 선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에서 기존 가치연구가 많이 활용해왔지만 설명력과 유용성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온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Schwartz(1992)<sup>78)</sup> 이후 지난 25여 년간 높은 수준의 이론적 세련화와 많은 경험적 증거를 축적해 온 선행 가치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 나. 정치이데올로기

사회과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진 정치이데올로기는 그만큼 무수히 많은 개념적 정의가 있어 왔다.<sup>79)</sup> 그럼에도 정치학에서

<sup>78)</sup>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pp. 1~65.

<sup>79)</sup> John T. Jos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no. 1 (2009), pp. 307~337.



가장 많이 알려진 개념적 정의 중 하나를 제시하자면, 정치이데올로기는 ‘믿음체계(belief system)’로서 “개념(idea)과 태도의 배열조합으로서 그 구성요소가 기능적 상호의존으로 서로 결합, 제약된 것”<sup>80)</sup>이다. <sup>81)</sup> 곧 정치이데올로기는 정부, 정당, 정치인, 정책 등 정치대상에 대한 안정적 신념으로서 단기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치태도와 달리 논리적 일관성(coherence)과 시간에 따른 일관성(consistency and persistence)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여론 설문조사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는 이와 같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곧, 서구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며 논리적으로 일관된 정책선호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선호도 자주 바뀌고 선호태도와 행동(투표 결정) 간의 일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정치이데올로기 정의에 부합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나라마다 한 자리 숫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82)</sup>

Jost(2006)는 이와 같은 경험적 증거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과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이데올로기 종말론’을 뒷받침했다고 진단한다.<sup>83)</sup>

<sup>80)</sup> Phillip E. Convers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Its Discontent*, ed. David E. Apter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4), p. 207.

<sup>81)</sup> 이와 같은 가치중립적 접근 외에 유력한 접근 방식으로 정치이데올로기를 전형적으로 현실을 오도하는, 체계적으로 왜곡된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현존 착취 체제를 정당화하는 허구의 신념체계로 이해하는, 주로 맑시스트 중심의 비판적 접근이 있다. John T. Jost, Brian A. Nosek, and Samuel D. Gosling,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3, no. 2 (2008), p. 127; Jost, Federico, and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p. 316.

<sup>82)</sup> Phillip E. Convers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Its Discontent*, ed. David E. Apter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4); Hans-Dieter Klingeman,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s,” in *Political Action*, eds. S. Barnes and M. Kass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79); Donald R. Kinder, “Opinion and Action in the Realm of Politics,”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s. D. T. Gilbert, S. T. Fiske, and G. Lindzey (Boston: McGraw-Hill; Distributed exclusively by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sup>83)</sup> Jost(2006)에 의하면, 이데올로기 종말론은 이외에도 추상적 좌우 정치이데올로기의

그는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 종말론이 무엇보다 정치이데올로기를 정치지식(political sophistication)과 등치하는 오류를 범했고, 시기상 성격, 태도, 인간성 등 심리학 핵심 주제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위기와 겹쳐 학문적인 검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Jost는 동료들과 후속 연구를 통해 최근 경험적 자료들과 심리학 방법론의 혁신은 언론담론에서 뿐만 아니라 유권자 수준에서도 정치이데올로기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데올로기 종말론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이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권자 자기평가를 측정하는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상황변수이자 동기에 영향을 주는 체제위협과 죽음 공포의 현저함 그리고 성격특성 변인인 개방성과 치밀함(conscientiousness)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투표행태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내게 한다.<sup>84)</sup>

Jost를 중심으로 한 정치심리 접근은 정치이데올로기를 인식, 존재, 관계 동기에 기반한 ‘동기 또는 기능 하부구조(motivational or functional substructure)’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 상부구조(discursive superstructure)’로 이루어져있다고 보고 동기 또는 욕구에 근본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정당, 후보, 쟁점, 집단 평가 및 선호와 체제정당화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동기화된 사회인지(motivated social cognition)’론으로 명명된 이들의 접근이 밝힌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확실성과 위협 회피 동기와 관련된 근본적 개인차가 사회인지 차이를 초래하며, 좌-우 또는 진보-보수 성향(proclivity)<sup>85)</sup>의 핵심적 차이는 사회변화에 대한 옹호 대 저항 그리고 불평등에

동기 기반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 부재, 좌-우 정치이데올로기의 철학적, 이론적 차별성 부재,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을 뒷받침하는 기본 심리특성 차이의 부재 등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되어 왔다. John T. Jost,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7 (2006), pp. 651~652.

<sup>84)</sup> *Ibid.*, pp. 651~652.

<sup>85)</sup> 성향과 정향은 큰 차이가 없는 서로 대체 가능한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원저자가 쓴

대한 수용 대 거부 차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좌·우 성향 모두 혼란보다는 질서를, 저항보다는 동조의 가치를 선호하는 가운데 우파 또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전통, 인습, 질서, 안정, 전통적 가치, 위계질서에 상대적인 선호를 보이는 반면에 좌파 또는 자유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저항, 혼란, 융통성, 페미니즘, 평등 등에 대해 상대적인 선호 또는 관용을 보인다.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은 자유주의적 사람에 비해 체제정당화에 대한 일관된 선호를 보이기도 한다.<sup>86)</sup>

그렇다면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간의 관계와 두 심리 변인이 정치태도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Caprara와 동료들(2006)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도 좌파 유권자가 중도 우파 유권자에 비해 보편주의, 박애, 자기주도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안전, 권력, 성취, 동조와 전통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sup>87)</sup> 그들은 또한 기본가치가 성격 특성보다 투표 이력과 미래 투표 의향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한편, 서구 자유주의 복지 국가나 종교 영향이 강한 전통적 국가 모두 기본가치 중 보편주의와 박애는 좌파 또는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정향(orientation)과 관계가 있고 동조와 전통은 우파 또는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정향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구공산권 국가에서는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정향 간에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 가치는 정치이데올로기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더 강한 것으로 구공산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더 약한 것으로 전통 국가에서는 그 강도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sup>88)</sup> 또한, 유럽, 북미, 남미, 아

---

대로 썼다.

<sup>86)</sup> Jost *et al.*,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p. 126~136; Jost *et al.*,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pp. 307~337.

<sup>87)</sup> Gian Vittorio Caprara *et al.*,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1 (2006), pp. 1~28.

시아와 오세아니아 16개국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도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본가치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대립적인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의 기저에는 관용과 모든 사람의 복지를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보편주의와 사회질서와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안전이라는 대립적 기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대립적 기본가치는 대립적인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을 통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89)</sup> 한편, Jost와 동료들은(2016)은 가치가 성격특성이 이데올로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 혹은 이데올로기 성향이 성격특성이 특정 가치를 우선시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경로모형에 의하여 검토한 후 현재로서는 후자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고 밝힌다.<sup>90)</sup>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또는 정치태도에 대한 한국 사회 및 정치심리학 선행연구는 주로 기본가치와 편견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컨대, 김혜숙(2002)은 평등, 사회정의 관용 관련 기본가치인 보편주의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거리감을 낮추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 정책을 찬성하는 진보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보편주의 가치는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장애인, 북한 사람 및 호남 사람 등 대표적

<sup>88)</sup> 서구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예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 있고 전통국가로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있으며 탈공산권 국가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Yuval Piarco, Schwartz, S. H., and Davidov, E.,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Basic Values and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Psychology*, vol. 32, no. 4 (2011), pp. 550~554.

<sup>89)</sup> Gian Vittorio Caprara *et al.*, "Basic Values, Ideological Self-Placement, and Voting: A Cross-Cultural Study," *Cross-Cultural Research*, vol. 51, no. 4 (2017), pp. 388~411.

<sup>90)</sup> John T. Jost, Elvira Basevich, Eric S. Dickson, and Sharareh Noorbaloochi, "The Place of Values in a World of Politics: Personality, Motivation, and Ideology," in *Handbook of Value Perspectives from economics, neuroscience, philosophy, psychology, and sociology*, ed. Tobias Brosch and David San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351~374.

소수자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고, 이들 약자집단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태도를 예측해 주었다. 자기주도 가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었지만 양성평등고용제에 대한 반대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91)</sup>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유권자의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일반적으로 반공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향이<sup>92)</sup>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등 정책에 대한 지지가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편주의가 진보 성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외(2015) 연구는 본격적으로 기본가치, 도덕성 기반(moral foundations) 그리고 성격 특질 등 기본 심리특성과 정치이데올로기, 정치태도, 투표 선택 간의 인과관계를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경로모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sup>93)</sup> 이들에 의하면,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성격이나 도덕성 기반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본 개인가치 10개 중 이론적으로 그리고 서구 경험적 연구에서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 전통, 성취, 권력 가치에서 보수 후보로 인식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진보 후보로 인식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높은 평균을 드러냈다. 또한,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경제성장/환경보호, 현 사회 체제정당화 등의 정치태도에 있

91)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pp. 91~104.

92) 강정인, “보수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편,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서울: 후마니타스, 2009), pp. 35~118;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pp. 11~31.

93) 김현정·박영욱·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pp. 103~132.

어서도 예측한 방향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sup>94)</sup> 이들은 기본 개인가치가 정치태도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후보선택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하에서는 서구 자료에 의존하거나 대표성이 제한된 표본에 의존해 온 국내외 기존 정치심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9대 대선 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유권자의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성향 분포 그리고 두 심리 요인의 관계와 정당 및 후보 선택에 대한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4. 경험적 분석: 기본가치, 정치이데올로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택

### 가. 기본가치 분석

본 연구에서는 Schwartz가 고안한 가치묘사질문지(Portrait Value Questionnaire) 중 10개 항목을 이용하여 기본 개인가치를 측정했다. 참고로 이 10개 항목 기본가치 측정도구는 제5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2005-2009)부터 포함되어 전 세계 인구의 약 90%의 가치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sup>95)</sup> 응답자는 개별 가치를 측정하는 10개 가치묘사 진술이 자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비슷한지 “나와 대단히 비슷하다, 나와 아주 비슷하다,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나와 약간 비슷하다, 나와 비슷하지 않다,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6점 척도로

94) 이들은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을 정책선호라는 정치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정치이데올로기는 특성 적응의 한 형태로 단기적 선호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 심리특성의 하나라는 이해와 배치된다.

95) Schwartz의 가치측정도구는 일반적으로 개별가치도 다항목(multi-item)으로 측정하여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최근에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치묘사질문지(PVQ-21)와 같은 축약판을 도입했고 본 조사에서는 세계가치조사처럼 PVQ-21 중에서 10개 항목을 추출하여 기본가치를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답하게 되는데 각 진술이 대표하는 가치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기본가치와 가치묘사 진술문

기본가치	가치묘사 진술문
자기주도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	이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이 사람에게는 주변이 안전하여 위협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쾌락	이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박애	이 사람에게는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	이 사람에게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극	이 사람에게는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조	이 사람에게는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주의	이 사람에게는 자연보호가 중요하다.
전통	이 사람에게는 전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사회나 개인 수준에서 가치는 개인에 따라 선호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Schwartz가 제시한 10개 기본가치로 포괄되며 속성과 가치 간 관계에 따라 원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는 삶의 원칙으로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국의 개인가치구조와 분포를 파악하는 연구는 보편적 가치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자 태도대상에 대한 국민의 일반 선호를 가늠하려는 시도이다. 가치는 추구하는 내재적 동기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구조와 분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기본가치 구조와 분포는 특정 정치적 대안과 정책이 국민 일반에게 수용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기본 개인가치 분포는 <표 IV-12>와 같다.

대체로 보아 응답자들은 보편주의, 동조, 안전 등의 가치를 다른 기본 가치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선호에 대해 “대단히 비슷하다”와 “아주 비슷하다”로 응답자의 비율이 44.3%, 43.6%, 42.6%로 나타났다. 보편주의에 대한 높은 선호는 내용상 평등과 조화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므로(<표 IV-10> 참조), 평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갈등 회피(조화)라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 선호가 동시에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조와 안전 가치는 ‘보수’라는 상위차원 가치로 포괄되는데 이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구와 국내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보편주의에 대한 선호가 지난 WVS 한국조사 결과(2005년 32.7%, 2010년 37.2%)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인물이 당선된 후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보적 정치이데올로기와 친화적인 기본가치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12 Schwartz 기본 개인가치 분포

(단위: 명, %)

기본 가치	대단히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계
자기 주도	23	136	330	346	149	18	1,002
	2.30	13.57	32.93	34.53	14.87	1.80	100.0
자극	38	178	313	275	163	35	1,002
	3.79	17.76	31.24	27.45	16.27	3.49	100.0
쾌락	51	275	315	242	110	9	1,002
	5.09	27.45	31.44	24.15	10.98	0.90	100.0



기본 가치	대단히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계
성취	64	283	349	198	103	5	1,002
	6.39	28.24	34.83	19.76	10.28	0.50	100.0
권력	11	107	274	214	329	67	1,002
	1.10	10.68	27.35	21.36	32.83	6.69	100.0
안전	132	295	329	180	53	13	1,002
	13.17	29.44	32.83	17.96	5.29	1.30	100.0
동조	107	330	332	177	48	8	1,002
	10.68	32.93	33.13	17.66	4.79	0.80	100.0
전통	40	272	365	229	86	10	1,002
	3.99	27.15	36.43	22.85	8.58	1.00	100.0
박애	50	257	377	227	84	7	1,002
	4.99	25.65	37.62	22.65	8.38	0.70	100.0
보편 주의	110	334	313	205	38	2	1,002
	10.98	33.33	31.24	20.46	3.79	0.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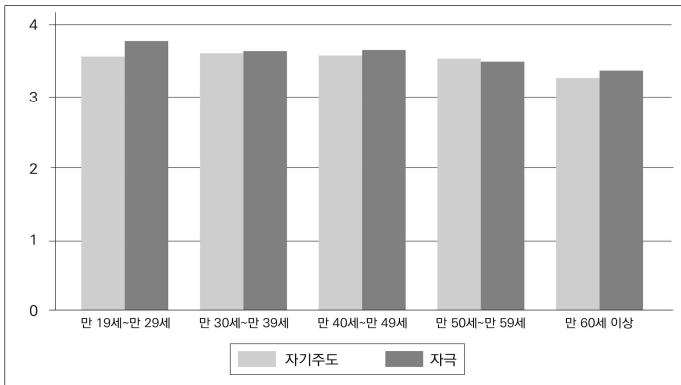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 사회 가치 분포를 좌우하는 변수로 무엇보다 세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성년 이전에 형성된 가치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청년세대와 성년 이후 세대와의 가치비교는 향후 이데올로기 지형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sup>96)</sup> 따라서 10개 기본가치를 4개 상위차원 가치로 묶어 세대별로 차이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각 가치는 동의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최저 1점, 최고 6점)를 나타내도록 재코딩해서 막대높이가 세대별 평균을 나타내도록 했다.

우선 세대별 자기주도와 자극 가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주도와 자극 가치에 대한 선호가 높고 특히 50대 이하와 60대 이

<sup>96)</sup>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상의 차이가 뚜렷하며 자극 가치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가 두드러진다(〈그림 IV-3〉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젊은 세대일 수록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경험적 사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진보 성향과 자기주도 및 자극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up>97)</sup> 다만, 상위차원 가치인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구성하는 이 두 가치에 대해서 전 세대에 걸쳐 “나와 약간 비슷하다”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선택지 사이를 의미하는 평균 약 3.5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 기본가치 중 권력 가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선호가 드러난 가치항목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의 친화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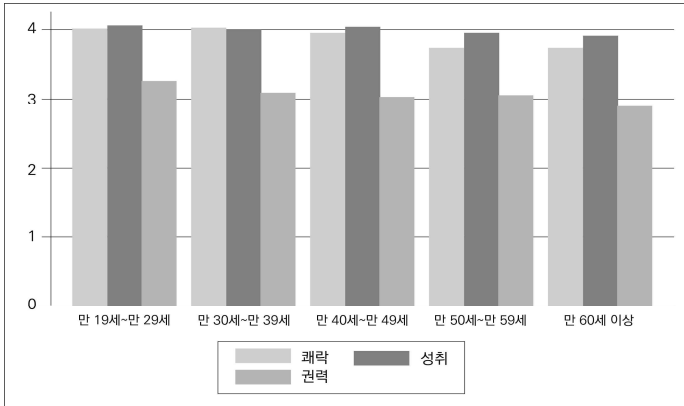
그림 IV-3 세대별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자기주도와 자극) 분포



<sup>97)</sup> Gian Vittorio Caprara *et al.*,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p. 1~28; Yuval Piurko, Schwartz, S. H., and Davidov, E.,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Basic Values and Meaning of Left-Right,” pp. 550~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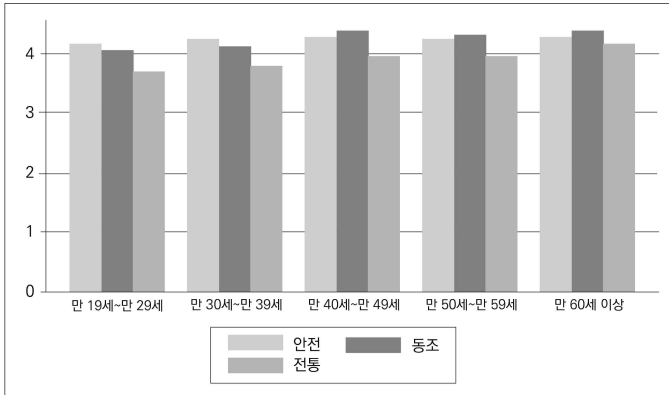
상위가치인 자기고양 가치로 묶여지는 쾌락, 성취, 권력 가치의 세대별 분포 <그림 IV-4>를 살펴보면, 먼저 쾌락가치에 있어서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세대의 차이가 뚜렷함이 눈에 띈다. 기존 가치연구에서 ‘쾌락’이라는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단일 묘사진술문에 의하면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라는 가치 내용이기 때문에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로 볼 수 있고 또한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변화에 대한 개방이라는 상위가치에도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대별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분포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성취 가치는 세대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나와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평균 4 점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10개의 기본가치 중 가장 낮은 선호가 나타난 권력가치가 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20대에서 그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립적 기본가치가 대립적 정치이데올로기 정향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맞다면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보편주의와 박애라는 자기초월 가치와 대립적인 자기고양 가치에 대한 선호가 전 세대에 걸쳐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담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실 한국 유권자에 대한 보수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아래에 살펴볼 기본가치로서 보수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4 세대별 자기고양 가치(패락, 성취, 권력) 분포



가치내용상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위가치로서 보수주의 가치의 세대별 분포 <그림 IV-5>를 보면 그 구성가치인 안전, 동조, 전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안전과 동조 가치의 세대별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다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도 알 수 있다. 안전 가치는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높은 선호를 받았는데 이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변화된 국민의식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분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지난 WVS 한국조사에서도 동조와 안전 가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는데 2005년, 2010년 조사에서 동조는 각각 50.6%, 52.2%, 안전은 각각 37.4%, 45.1% 비율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느 정도는 보수 정치 담론의 영향력이 상당 기간 견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전통 가치는 40대 이상과 그 아래 세대의 차이가 비교적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치가 현재 세대 간 갈등을 상당 부분 설명하는 기본가치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 세대별 보수주의 가치(안전, 동조, 전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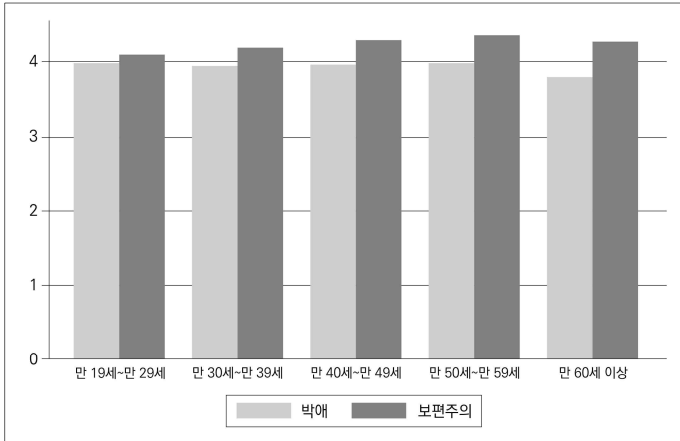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편주의와 박애로 이루어진 상위가치인 자기초월 가치 선호에 대한 세대별 분포 <그림 IV-6>을 보면, “평등, 내적조화, 세계평화, 자연과의 조화, 지혜, 아름다운 세상, 사회정의, 관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등을 포괄하는 보편주의는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높은 선호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높은 선호가 드러났다. “영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성숙한 사랑, 참된 우정, 충성스러운, 용서하는, 도움이 되는, 정직한, 책임감 있는” 등을 나타내는 박애도 6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가 나타나긴 했지만 비교적 전 세대에 걸쳐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에서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보편주의와 박애에 대해 세대에 걸쳐 높은 지지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한국 유권자의 기본가치 배열이 앞으로도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담론에 상대적으로 친화성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다른 세대와 뚜렷이 구분되는 진보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소위 386세대<sup>98)</sup>에서 보편주의 가치에 대한 수용도가 높

<sup>98)</sup> 노환희·송정민, “세대균열에 대한 고찰: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2013), pp. 162~164.

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정치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기본가치의 영향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6 세대별 자기초월 가치(박애와 보편주의) 분포



## 나. 기본 심리특성과 사회경제변수 간의 관계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와 기본가치 간에는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자기 주도  $r=-0.096$  전통  $r=.065$ ; 상위가치로서 변화에 대한 개방  $r=-.088$ ), 그 크기도 크지 않고 다른 가치와는 대체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본가치와 정치태도와 선택을 매개하는 정치이데올로기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두 심리특성 변인과 사회경제 변수 그리고 정당 및 후보 선택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우선 사회경제 변수에 따라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와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의 4개 상위가치 그리고 성격특질로 분류되는 권위주의 성향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sup>99)</sup> <표 IV-13>은 연령을 포함하여 성별,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기본

심리특성 변인의 평균비교를 나타낸다. 먼저 성별에 따른 기본 심리특성 변인 평균 차이는 대체로 없어 보인다. 예컨대, 여성(M=5.19)이 남성(M=5.02)보다 조금 더 보수 성향으로 자기평가를 하고 있지만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p=0.168).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차가 나타난 심리특성은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로 남성(M=3.63)이 여성(M=3.40)보다 높게 지지하고 있다. 자율과 자극 그리고 자기초월 가치에도 걸쳐있는 쾌락으로 구성된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는 상위차원으로서 보수와 대립적인 가치로서 상대적으로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여성 유권자의 보수 성향 기저에 기본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up>100)</sup>

표 IV-13 사회경제변수와 정치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성향, 기본가치 평균비교

		진보-보수	권위주의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N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	497	5.02(2.04)	3.35(0.56)	3.63(0.89)	4.15(0.82)	4.11(0.86)	3.66(0.78)
여	505	5.19(1.91)	3.31(0.61)	3.40(0.91)	4.12(0.85)	4.10(0.86)	3.63(0.79)
연령							
만 19세~만 29세	175	4.40(1.60)	3.15(0.61)	3.67(0.84)	3.97(0.79)	4.07(0.83)	3.79(0.74)
만 30세~만 39세	176	4.62(1.85)	3.27(0.49)	3.61(0.88)	4.04(0.74)	4.10(0.85)	3.71(0.75)

<sup>99)</sup>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는 매우 진보를 0, 중도를 5, 매우 보수를 10으로 하여 응답자가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답하게 했다.

<sup>100)</sup>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pp. 35~50;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pp. 91~104;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pp. 29~63.

		진보-보수	권위주의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N	M(SD)	M(SD)	M(SD)	M(SD)	M(SD)	M(SD)
만 40세~만 49세	208	4.85(1.83)	3.30(0.61)	3.60(0.88)	4.20(0.86)	4.14(0.85)	3.68(0.80)
만 50세~만 59세	199	5.24(1.94)	3.39(0.61)	3.49(0.91)	4.15(0.88)	4.19(0.93)	3.58(0.85)
만 60세 이상	244	6.06(2.09)	3.48(0.54)	3.28(0.96)	4.25(0.84)	4.04(0.82)	3.52(0.76)
학력							
중졸 이하	157	5.86(2.08)	3.54(0.48)	3.11(0.94)	4.12(0.87)	3.91(0.83)	3.44(0.74)
고졸 이하	418	5.14(1.99)	3.37(0.56)	3.58(0.89)	4.18(0.86)	4.17(0.85)	3.65(0.80)
대졸 이상	427	4.79(1.85)	3.22(0.61)	3.60(0.88)	4.10(0.78)	4.11(0.86)	3.72(0.78)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0	5.51(2.32)	3.45(0.55)	3.23(1.01)	4.13(0.92)	3.99(0.93)	3.45(0.80)
200~300만 원	166	5.25(1.87)	3.43(0.58)	3.41(0.97)	4.23(0.90)	4.12(0.95)	3.58(0.86)
300~400만 원	208	5.10(1.94)	3.36(0.55)	3.59(0.81)	4.14(0.82)	4.18(0.83)	3.71(0.74)
400~500만 원	201	4.91(1.84)	3.30(0.60)	3.56(0.82)	4.14(0.81)	4.07(0.84)	3.69(0.76)
500만 원 이상	286	4.95(1.95)	3.21(0.60)	3.63(0.91)	4.07(0.76)	4.11(0.79)	3.71(0.78)
Total	1001	5.10(1.98)	3.33(0.58)	3.52(0.91)	4.13(0.83)	4.10(0.86)	3.65(0.79)

〈표 IV-13〉에 나타난 세대와 기본 심리특성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세대 대신 만 나이 기준 연령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연령은 예상대로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 $r=0.305$ ,  $p<0.05$ ) 곧, 나이가 들수록 보수 성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연령은 상위차원 가치로 보수 정치성향과 관련이 있는 보수와 양의 상관관계( $0.108$ ,  $p<0.05$ )를 진보 정치성향과 관련이 있는 변화에 대한 개방과 부의 상관관계( $-0.142$ ,  $p<0.05$ )를 나타내어 정치이데올로기와 기본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험적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sup>101)</sup> 참고로 연령은 권위주의의 성향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0.196,  $p < 0.05$ ).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 심리특성 변인이 성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치와 권위주의 성향과 같은 성격특성은 더욱 더 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사회 이데올로기 지형이 진보 성향에 기운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과 기본 심리특성 변인 간의 관계를 일원변량분석 후 투키 짝비교 사후검정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과 300만 원 이상 또는 4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을 올리는 중산층 이상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성향( $M=5.51$ )을 나타냈으며, 다른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 정치성향을 나타낸 400만 원~500만 원 가구소득층( $M=4.91$ ), 5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층( $M=4.95$ )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을 뒷받침하는 가치에도 같은 관계가 나타났는데 곧,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에 대해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층에서는 3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층에 비해 그 지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200~300만 원 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구소득층과는 달리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개인주의 성향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고양 가치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보수와 자기초월 가치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층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권위주의 성향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

<sup>101)</sup> 연령과 기본가치 간 상관관계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p < 0.05$ ) 것을 살펴보면 자기주도(-0.106) 자극(-0.127), 쾌락(-0.102), 권력(-0.084), 동조(0.098), 전통(0.148), 보편주의(0.0363) 등이 있다. 다른 기본가치와 달리 보편주의와 권력은 비록 낮은 상관관계 계수이지만 연령에 따른 정치이데올로기 정향과 다른 양과 부 방향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혜숙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 세대가 개인주의적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pp. 44~46;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pp. 98~100.

하 가구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두 저소득층(200만 원 미만  $M=3.45$ , 200만 원~300만 원  $M=3.43$ )의 권위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기본 심리특성과 정당지지 및 투표결정 간의 관계

그렇다면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와 기본가치 그리고 권위주의 성향이 대선후보 지지집단과 정당지지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IV-14>는 제19대 대선후보 지지집단, 정당일체감 그리고 제18대 대선후보 지지집단의 기본 심리특성 변인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지집단의 평균 차이는 일원변량분석 후 튜키 짝비교 사후검정으로 분석했다. 우선 예상대로 진보 후보로 알려진 문재인 후보 지지집단( $M=4.51$ )이 보수 후보로 알려진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 $M=6.59$ )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지지집단은 중도를 나타내는 5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구분되고 있다.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은 다른 후보 지지집단에 비해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드러났으며,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인 심상정 후보 지지집단( $M=4.47$ )은 물론이고 중도 성향을 보인 안철수 후보 지지집단( $M=5.17$ )과 유승민 후보 지지집단( $M=5.04$ )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을 제외하고는 각 후보 지지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후보의 정치이데올로기 위치와 부합하게 지지집단의 자기평가 평균이 나타난 편이지만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을 제외하고는 정치 성향이 의미 있는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도와 진보 성향 유권자의 선택이 자신의 주관적 정치성향 평가 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으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보수와 진보 후보의 양자 대결이었던 제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 지지집단( $M=5.94$ )과 문재인 후보 지지집단( $M=4.33$ ) 간에도 후보의 인식된 정치이데올로기 위치에 부

합하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드러냈다( $p < 0.00$ ).

“가깝게 느끼는 정당”으로 측정한 정당일체감에서도 예상대로 진보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지지집단( $M=4.27$ )이 보수 정당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지지집단( $M=6.84$ )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지지집단은 중도를 나타내는 5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뚜렷하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구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집단은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인 정의당 지지집단( $M=4.00$ )이나 진보에 가까운 중도 성향을 보인 국민의당 지지집단( $M=4.82$ )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도 보수 성향으로 나타난 바른정당 지지집단( $M=5.85$ )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유한국당 지지집단은 다른 정당 지지집단에 비해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드러났으며, 모든 집단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당 지지집단은 정의당 지지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의당 지지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바른정당 지지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한 정당배열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라는 진보 성향 유권자 지지정당의 정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성향 유권자 지지정당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4 대선 선택과 정당일체감별 정치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성향, 기본 가치 분포

		진보-보수	권위주의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N	M(SD)	M(SD)	M(SD)	M(SD)	M(SD)	M(SD)
제19대 대선							
문재인	426	4.51(1.79)	3.30(0.59)	3.54(0.92)	4.15(0.84)	4.13(0.86)	3.63(0.79)
홍준표	197	6.59(1.88)	3.45(0.55)	3.45(0.85)	4.14(0.79)	4.05(0.80)	3.59(0.78)
안철수	147	5.17(1.87)	3.33(0.64)	3.61(0.95)	4.29(0.82)	4.26(0.86)	3.85(0.78)

		진보-보수	권위주의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N	M(SD)	M(SD)	M(SD)	M(SD)	M(SD)	M(SD)
유승민	47	5.04(1.57)	3.19(0.54)	3.63(0.93)	4.01(0.81)	4.20(0.83)	3.90(0.67)
심상정	30	4.47(1.59)	3.45(0.52)	3.38(0.81)	4.12(0.65)	4.12(0.69)	3.58(0.67)
소계	847	5.13(1.99)	3.34(0.59)	3.53(0.91)	4.16(0.82)	4.14(0.84)	3.67(0.78)
정당일체감							
더불어민주당	331	4.27(1.89)	3.28(0.61)	3.60(0.92)	4.19(0.85)	4.15(0.84)	3.67(0.81)
자유한국당	152	6.84(1.87)	3.51(0.52)	3.42(0.82)	4.18(0.82)	4.05(0.81)	3.58(0.78)
국민의당	39	4.82(1.37)	3.54(0.77)	3.85(0.97)	4.44(0.91)	4.51(0.78)	4.07(0.85)
바른정당	52	5.85(1.51)	3.31(0.58)	3.77(0.92)	4.20(0.70)	4.13(0.86)	3.85(0.73)
정의당	27	4.00(2.22)	3.02(0.59)	3.72(0.74)	4.26(0.79)	4.46(0.84)	3.79(0.65)
소계	601	5.08(2.15)	3.35(0.61)	3.59(0.90)	4.21(0.83)	4.16(0.83)	3.70(0.80)
제18대 대선							
박근혜	429	5.94(1.90)	3.39(0.54)	3.47(0.90)	4.14(0.81)	4.10(0.83)	3.59(0.76)
문재인	255	4.33(1.79)	3.32(0.65)	3.57(0.98)	4.28(0.84)	4.25(0.88)	3.74(0.85)
소계	684	5.34(2.01)	3.37(0.59)	3.51(0.93)	4.19(0.83)	4.15(0.85)	3.65(0.79)

대선 후보 선택과 정당일체감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던 지지집단 간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 차이는 다른 기본 심리특성변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등 4개 상위차원 가치 모두에서 제19대 대선 후보 지지집단 간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적 선택이 단순했던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집단이 박근혜 후보 지지집단에 비해 자기초월 가치(문재인 M=4.25, 박근혜 M=4.10)와 자기고양 가치(문재인 M=3.74, 박근혜 M=3.59)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예상과는 다르게 보수(M=4.28)에 대한 지지가 박근혜 후보 지지집단(M=4.14)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p < 0.05$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5년이 지난 대선의 투표

선택에 대한 오기억 가능성으로 해석에 신중해야겠지만 상위가치로서 보수가 안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세월호 이후에 강화된 문재인 지지집단의 기본가치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sup>102)</sup> 한편, 정당일체감에 따른 지지집단 간의 선호가치 차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집단에서만, 그리고 자기초월과 자기고양가치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집단은 두 가치 모두 국민의당 지지집단에 비해 낮게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두 정당 지지자의 진보-보수 성향 차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두 집단의 연령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M=3.51)과 국민의당(M=3.54) 지지자는 정의당(M=3.02) 지지자에 비해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보이고 있다.

## 라. 소결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기본 심리특성으로서 유권자 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개인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심리학 논의를 소개한 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심리특성 변인과 정당 및 후보 선택에 대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관찰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이론적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에 선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온 기본가치는 정당일체감과 후보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후보 선택 집단과 정당일체감 집단에 따른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의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보 후보와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집단과 보수 후보와 정

<sup>102)</sup> 실제로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택집단(M=4.42)은 박근혜 후보 선택집단(M=4.19)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안전가치 선호가 높았다.

당으로 알려진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집단의 진보-보수 성향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등의 상위차원 기본가치는 대체로 정당과 후보 선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사회경제 변수 중 세대는 정치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가치와도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자신을 보수 정치성향으로 평가하고 있고, 보수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보수 가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반면에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에 대해서는 그 지지가 낮았다.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은 물론 정치일체감과 선택에 있어 기본가치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진보-보수 성향과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사실은 선행연구 결과대로 기본가치가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이 근본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 기본가치는 특성 적응이라는 성격변인으로 성향과 함께 생태적 성격요소로서 변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본 심리특성 변인이 성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향후 한국사회 이데올로기 지형이 진보 성향에 친화성 있는 구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 정치이데올로기 성향 차이와 이와 관련된 가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 또는 편의표집에 기초한 국내 정치심리 가치연구와 비교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로 외적 타당성을 보완했고,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이라는 두 기본 심리특성 변인과 정당일체감과 후보선택이라는 정치적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있어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대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다항목으로 측정되지 않아 기본가치의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로 인해 이의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기본가치와 정당일체감 및 후보선택 간에 실제 의미 있는 관계가 뚜렷하

게 드러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정치이데올로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기본 심리특성과 정치태도와 정당일체감, 후보 선택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권위주의 성향과 성격 5요인 등 성격 특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박종철(통일연구원)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 1. 통일경로와 통일국가정체성의 의미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통일과정에는 통제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과 경로의 다양을 단순화하면, 통일은 대체로 3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통일이 달성되더라도 통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단계는 통일준비단계이다. 통일준비단계는 남북한이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을 추구하며 평화정착, 교류·협력,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통일협상단계이다. 남북한이 평화·협력을 공고화하거나 또는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남북한이 통일방법, 통일절차, 통합조건 등에 대해서 협상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법적·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 제도적 통합과 사회심리적 내적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통일이 어떤 경로를 거쳐 달성되든지 실질적으로 통일과정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화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는 정책적 변화, 엘리트연합구조의 변화, 정권의 변화, 국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변화가 있다. 북한의 변화 유형 및 변화 경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든지 또는 불안정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북한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통일협상과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정치적 개혁과 경제개혁·개방을 실시하고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상황이 되어야 실질적인 통일논의가 가능하다.

둘째, 통일에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통일을 저해하지 않는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신냉전 질서가 동북아에 자리잡을 경우,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다. 돌이켜 보면 프랑스 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등은 역사적 대변혁기에 발생하였으며, 베트남 통일, 독일 통일 등도 구체적 유형은 다르지만 역사적 대변혁의 기회를 포착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남북통일도 역사적 대변혁의 기회를 포착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하다.

세 번째, 남한의 통일역량이다. 통일역량에는 외교능력, 북한관리능력, 남북관계 관리능력, 남한 내부의 능력 등이 포함된다. 북한관리 능력과 남북관계 관리능력은 북한의 변화를 안정적이고 관리가능한 상태로 이끌어가며 통일경로를 밟도록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남한 내부에서 법적·제도적 인프라 마련, 사회적 거버넌스 형성, 사회심리적 포용력 배양, 사회적 갈등관리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한민족은 오래동안 단일민족으로 혈통, 언어, 문화, 중앙집권 국가 전통을 바탕으로 밀도 높은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통치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체성과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두고 이념과 체제면에서 대립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에 근거하여 국가골격을 마련하였고 상반되는 방향으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통일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남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과 정체성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일은 분단 기간 동안의 정체성 경쟁을 일단락시키고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정치제도, 법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등 제도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은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은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이유와 의미를 되새기면서 통일

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숙고할 것이다. 통일국가가 어떤 대내외 정체성을 지향해야 할지, 비전과 상징성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통일 이후 남한 주민은 통일 비용 부담과 통일 후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통일의 의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통일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한편,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는 한편, 실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은 이념 및 체제의 이질감, 문화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질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구성원의 집단적 의식인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정체성을 이루는 대내적 요인은 혈연, 언어, 문화, 역사적 경험, 가치의 공유 등이다. 이 가운데 혈통, 언어, 문화 등이 귀속적 요인인 반면, 역사적 경험, 가치 등은 비귀속적 요인이다. 한국과 같이 언어, 혈통, 문화 등에서 오래동안 단일집단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미국, 호주 등은 역사적 경험, 가치 등 비귀속적 요인에 의해 국가정체성이 형성된다. 한편, 국가정체성은 지정학적 요인, 국제환경의 위협 등 대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외국의 침입이나 전쟁, 식민지배 등으로 인해 공동의 집단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국가정체성의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통일 이후 진정한 내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은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결합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대내적으로 소속감, 일체감, 유대감을 인식하고 대외적으

로 공통의 차별의식과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생겨난다.

## 2.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의 기본방향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다층적·복합적 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원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는 남북한 간 대립의 역사를 넘어 통일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일체감을 확산해야 한다. 분단시대의 불신, 대립, 배타성을 극복하고 화합과 공존으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간 존재하는 이질적인 제도, 가치, 규범 등을 포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수용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획일적·일방적인 동화를 지양하고 여러 층위의 문화유형이 겹겹으로 공존할 수 있는 다층적 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통일국가정체성은 민족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해서 개방성과 공존을 바탕으로 열린 민족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결합하는 복합적 정체성, 또는 다중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통일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은 위로부터의 접근법(top down approach)과 아래로부터의 접근법(bottom up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위로부터의 접근법은 국가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주도 세력이 국가정체성의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법과 정치사회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접근법은 사회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규범이 표출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과정을 거쳐서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국가정체성은 위로부터의 접근과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상호 접근하고 침투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양 방향의 접근을 통해 국가정체성이 쌍방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통일국가정체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이 통일국가 미래상, 통일국가의 비전, 공동체 유대감, 공동체 가치관 등에 대한 소통을 바탕으로 통일국가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

한편, 통일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 형성에 관한 동화주의(assimilation)는 우위 문화가 주도적으로 하위 문화를 흡수, 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이크론은 여러 개의 문화가 공존하되 전체적으로 조화, 균형, 분점을 통해 큰 그림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광로이론은 여러 개의 문화가 녹아들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모자이크론을 바탕으로 용광로이론을 지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제도 차원에서 국가유형(단방제, 연방제),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행정체계(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분권형 행정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익대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치과정을 통해 소화·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의 참여통로 확대, 이익대표 창구 마련, 권력 및 경제·사회적 가치의 분배 등에서 형평성과 화합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민족화합위원회], [과거 청산위원회] 등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가치통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방안, 남한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방안,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관리교육방안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역할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방안들을 실천해야 한다.

### 3. 통일국가정체성의 지향점: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 새로운 가치의 모색

그렇다면 통일국가정체성은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할까?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이유는 통일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통일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므로 새로운 가치의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국가의 정체성으로 민족주의의 적실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일차적으로 민족주의의 실현에서 찾으려는 흐름이 있다. 단일 민족국가의 역사적 전통에서 볼 때, 통일을 민족주의의 완성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특히 19세기 말 한민족이 근대민족국가를 완성하지 못하고 일제 식민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통일은 지연되고 단절된 역사의 복원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오늘날 민족주의 담론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민족과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세계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이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가와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세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국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 인간안보, 재난 대응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세대 간 의식의 격차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통일미래 사회의 주역인 신세대는 이념, 민족 등의 고전적 가치에 대한 호응도가 낮으며, 이러한 가치에 대한 역사적 경험도 지니고 있지 않다. 신세대는 민족주의와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신축적이면서도 탄력성있고 개방성을 지닌 열린 가치를 선호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현상도 고려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다문화인구의 증가로 인해 미래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치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도 열린 민족주의와 함께 한국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 신세대 가치관의 개방성, 민족주의의 쇠퇴, 다문화현상 등을 고려하면, 민족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다원화하고 개방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통일편익론의 설득력을 검토할 수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미래상을 설명하기 위해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통일 편익론이 제시되었다. 통일편익론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미래상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통일담론의 영역을 넓힌 점은 긍정적이다. 통일편익론은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고 당연시했던 타성에서 벗어나서 통일을 현실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런 점에서 통일편익론은 현실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신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 또한 통일편익론은 한국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통일미래상을 실질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일편익론은 통일비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라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통일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편익론은 편익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과 주변국에게도 제공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일편익론은 통일이라는 종합적 가치문제를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여 설명함으로써 설득력이 제한되었다. 통일 편익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통일편익론은 통일의 혜택을 남한 국민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통일편익론은 편익이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중점을 둠으로써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의 제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소홀히하였다.

또한 통일편익론은 통일 편익이 있더라도 통일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통일 편익이 장미빛 미래로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통일비용과 사회적 후유증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통일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편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통일국가정체성은 민족주의와 통일편익론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까? 통일국가정체성은 다층성, 복합성, 역동성, 포용성과 개방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국가정체성은 다층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통일국가정체성은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 동북아 지역,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시민정체성, 동북아지역 정체성, 보편적 가치의 세계적 정체성이 층층이 존재하는 다층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중정체성에 중첩되는 연결고리와 안전판을 만들어서 다중정체성이 상충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정체성은 복합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사회의 자율성과 국가의 역할, 공동체의 대외관계, 공동체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이 결합되는 복합성을 띠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정체성은 역동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통일준비단계, 통일협상단계, 통일 이후 통합단계를 거치면서 골격을 갖추고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전환되며 변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더욱이 통일국가정체성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국내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위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역동성과 동태성을 지닐 것이다.

넷째, 통일국가정체성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은 계층,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통일국가정체성은 분단 기간의 분열과 대립,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국가정체성은 대내적 통합을 지향하면서도 대외적 개방성을 함유해야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박종철·이상신·현인애·송영훈·정한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박종철·박주화·홍석훈·송영훈·이상신·조원빈.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_\_\_\_\_. *The Civic Culture Revisited: an Analytic Study*. Boston: Little, Brown, 1980.
- Banfield, Edward C.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Illinois: Free Press; Research Center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University of Chicago, 1958.
- Bickel, Robert. *Multilevel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It's Just Reg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 Citrin, Jack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Fiske, Susan T. and Shelley E. Taylor. *Social Cognition*. 2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91.
- Geer, John Gray. *Public Opinion and Polling Around the World: a Historical Encyclopedia*.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2004.
- Hofstede, Geert H.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iti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1.
- Howard, Marc Morjé.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Europe*.

-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Kreft, Ita and Jan de Leeuw. *Introducing Multilevel Modeling*.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8.
- Kuklinski, James H. ed. *Citizens and Politics: Perspectives from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cClosky, Herbert and John Zaller. *The American ethos: public attitudes toward capitalism and democrac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Nisbett, Richard E.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Free Press, 2003.
- Peters, B. Guy. *Comparative politics: theory and method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okeach, Milton.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 Schattschneider, Elmer Eric.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Theiss-Morse, Elizabeth. *Who counts as an American?: the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Turner, John C.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87.

## 2. 논문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재) 동아시아연구원, 2011.

\_\_\_\_\_.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27집 3호, 2011.

강정인. “보수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편.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금진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9.

권수현. “한국인의 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2007-2014.” 『평화학연구』. 제17권 5호, 2016.

김갑식. “한국사회 남북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김석호·신인철·하상응·정기선.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제36권 1호, 2013.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김현정·박영옥·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김혜숙.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6권 2호, 2000.

\_\_\_\_\_.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 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16권 1호, 2002.
- \_\_\_\_\_.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4호, 2007.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2011.
- 나은영·차유리.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1979년, 1988년, 및 2010년의 조사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4호, 2010.
- 노환희·송정민. “세대균열에 대한 고찰: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2013.
- 박혜경. “언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26권 3호, 2012.
- 서지영.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한국발달심리학회지』. 제25권 2호, 2012.
- 신상희·허태균·Kashima Yoshihisa. “국민정체감에 대한 여러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4호, 2012.
-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연구』. 제25권 2호, 2013.
- 윤소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남북한 사회가치 인식 비교 - Schwartz 가치 척도를 중심으로 -.” 『통일연구』. 제20권 2호, 2016.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統一問題研究』. 제23권 1호, 2011.
- 이명진·최유정·최셋별. “연구논문 :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권 1호, 2010.
-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 장승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3호, 2010.
- 정기선·이선미. “기획특집: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2011.
-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5권 2호, 2013.
-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 2010.
- Alemán, José and Dwayne Woods. “Value Orientations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9, no. 8. 2016.
- Bilsky, Wolfgang and Shalom H. Schwartz. “Measuring motivations: Integrating content and meth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4, no. 8. 2008.
- Blank, Thomas and Peter Schmidt.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2. 2003.
- Brewer, Marilynn B.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7, no. 5. 1991.
- Brewer, Marilynn B. and Kathleen P. Pierce. “Social Identity Complexity and Outgroup Toler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1, no. 3. 2005.
- Brosch, Tobias and David Sander. “Comment: The Appraising Brain: Towards a Neuro-Cognitive Model of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Emotion Review*. vol. 5, no. 2. 2013.
- Caprara, Gian Vittorio, Shalom Schwartz, Cristina Capanna, Michele Vecchione, and Claudio Barbaranelli.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1. 2006.
- Caprara, Gian Vittorio *et al.* “Basic Values, Ideological Self-Placement, and Voting: A Cross-Cultural Study.” *Cross-Cultural Research*. vol. 51, no. 4. 2017.
- Chun, Kyung Ock and Kwang-Il Yoon. “MIPEX and Korea: Assessment and Lesson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



4, no. 2. 2014.

- Converse, Philip.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  
In *Ideology and Discontents*. edited by David E. Apter. New York: Free Press, 1964.
- Curtice, John. "Comparative Opinion Surveys."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edited by R. J. Dalton and H.-D. Klinge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Datler, Georg, Wolfgang Jagodzinski, and Peter Schmidt. "Two theories on the test bench: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of the theories of Ronald Inglehart and Shalom Schwartz."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2, no. 3. 2013.
- Dobewall, Henrik and Maksim Rudnev. "Common and Unique Features of Schwartz's and Inglehart's Value Theories at the Country and Individual Levels." *Cross-Cultural Research*. vol. 48, no. 1. 2014.
- Feldman, Stanley. "Values, Ideology,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Attitudes."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D. O. Sears, L. Huddy and R. Jervi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Feldman, Stanley and John Zaller. "The Political Culture of Ambivalence: Ideological Responses to the Welfare St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1. 1992.
- Greene, Steven. "Understanding Party Identification: A Social Identity Approach." *Political Psychology*. vol. 20, no. 2. 1999.
- Ha, Shang E. and Seung-Jin Jang. "National Identity, National Pride, and Happiness: The Case of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21, no. 2. 2015.
- Hammack, Phillip L. "Theoretical Foundations of Identity." In *The Oxford Handbook of Identity Development*. edited by Kate C. McLean and Moin Sy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Huddy, Leonie. "From Social to Political Ident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Political Psychology*. vol. 22, no. 1. 2001.
- Huddy, Leonie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no. 1. 2000.
- Inglehart, Ronald, Roberto Foa, Christopher Peterson, and Christian Welzel.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3, no. 4. 2008.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Analyzing Cross-Level Linkages."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1. 2003.
- Jones, Frank L. and Philip Smith.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Patterns." *Journal of Sociology*. vol. 37, no. 1. 2001.
- Jones, F. L. and Philip Smith.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no. 2. 2001.
- Jost, John T.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7. 2006.
- Jost, John T., Brian A. Nosek, and Samuel D. Gosling.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3, no. 2. 2008.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no. 1. 2009.
- Jost, John T., Elvira Basevich, Eric S. Dickson, and Sharareh Noorbaloochi. "The Place of Values in a World of Politics:

- Personality, Motivation, and Ideology.” In *Handbook of Value Perspectives from economics, neuroscience, philosophy, psychology, and sociology*. edited by Tobias Brosch and David San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Jusko, Karen Long and W. Phillips Shively. “Applying a Two-Step Strategy to the Analysis of Cross-National Public Opinion Data.” *Political Analysis*. vol. 13, no. 4. 2005.
- Kinder, Donald R. “Opinion and Action in the Realm of Politics.”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D. T. Gilbert, S. T. Fiske and G. Lindzey. Boston: McGraw-Hill; Distributed exclusively by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Kinder, Donald R. and D. Roderick Kiewiet.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2. 1981.
- Klingeman, Hans-Dieter.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s.” In *Political Action*. edited by S. Barnes and M. Kass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79.
- Kluckhohn, Clyde.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edited by T. Parsons and E. Shil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 Kosterman, Rick and Seymour Feshbach.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vol. 10, no. 2. 1989.
- Kunovich, Robert M.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no. 4. 2009.
- Li, Qiong and Marilynn B. Brewer. “What Does It Mean to Be an American? Patriotism, Nationalism, and American Identity after 9/11.” *Political Psychology*. vol. 25, no. 5. 2004.
- Lipset, Seymour Martin. “Affirmative Action and the American Creed.” *The Wilson Quarterly (1976-)*. vol. 16, no. 1. 1992.

- McAdams, D. P. and Pals, J. L. "A New Big Five: Fundamental Principles for an Integrative Science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3. 2006.
- Oyserman, Daphna and Ayse K. Usku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ocietal-Level Processes with Implications for Individual-Level and Society-Level Outcomes." In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s and Cultures*. edited by F. J. R. v. d. Vijver, D. A. v. Hemert and Y. H. Poortinga.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8.
- Oyserman, Daphna, Heather M. Coon, and Markus Kimmelmeier.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8, no. 1. 2002.
- Parrillo, Vincent N. and Christopher Donoghue.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42, no. 2. 2005.
- Patricia, M. Greenfield. "Three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culture: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can they go?"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 no. 3. 2000.
- Patrick, Glenda M. "Political Culture." In *Social science concepts: a systematic analysis*. edited by G. Sartori.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4.
- Piurko, Y., S. H. Schwartz, and E. Davidov.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Basic Values and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Psychology*. vol. 32, no. 4. 2011.
- Reisinger, William M. "The Renaissance of a Rubric: Political Culture as Concept an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7, issue 4. 1995.
- Roccas, Sonia and Andrey Elster. "Group Identitie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edited by Linda R. Trop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Roccas, Sonia and Marilynn B. Brewer. "Social Identity Complexity."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6, no. 2. 2002.
- Roccas, Sonia, Shalom H. Schwartz, and Adi Amit. "Personal Value Priorities and National Identifica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31, no. 3. 2010.
- Schwartz, Shalom H.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vol. 5, issue 2. 2006.
- \_\_\_\_\_. "The Refined Theory of Basic Values." In *Values and Behavior: Taking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edited by S. Roccas and L. Sagiv.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 Schwartz, Shalom H. and Wolfgang Bilsky.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no. 3. 1987.
- Schwartz, Shalom H. *et al.*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2, no. 5. 2001.
- Schwartz, Shalom H., Gian Vittorio Caprara, and Michele Vecchione. "Basic Personal Values, Core Political Values, and Voting: A Longitudin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31, no. 3. 2010.
- Schwartz, Shalom H.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Mark Zanna. Orlando: Academic Press, 1992.
- Simon, Jordi *et al.*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A Bibliographic and Bibliometric Review of the Instrument." *Aloma: Revista de Psicologia, Ciències de l'Educació i de l'Esport*. vol. 35, no. 1. 2017.
- Wark, Colin and John F. Galliher. "Emory Bogardus and the Origins of the Social Distance Scale." *The American Sociologist*. vol. 38, no. 4. 2007.

- Welzel, Christian and Ronald Inglehart. "Mass Belief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edited by C. Boix and S. C. Stok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Welzel, Christian, Ronald Inglehart, and Hans-Dieter Klingemann. "The theory of human development: A cross-cultur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2, no. 3. 2003.
- Wright, Matthew, Jack Citrin, and Jonathan Wand. "Alternative Measures of American National Identity: Implications for the Civic-Ethnic Distinc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33, no. 4. 2012.

### 3. 기타

『중앙일보』.

통일연구원 <[www.kinu.or.kr](http://www.kinu.or.kr)>.

Huddy, Leonie and Alexa Bankert. "Political Partisanship as a Social Identit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2017), DOI: 10.1093/acrefore/97861090228637.013.250.

Nenad Miscevic. "National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December 15, 2014). Edward N. Zalta (ed.). <<https://plato.stanford.edu>>.

Primoratz, Igor. "Patriot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pril 26, 2017), Edward N. Zalta (ed.), <<https://plato.stanford.edu>>.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 연구보고서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착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론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는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1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2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연례정보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이후 통합방안(5/5년차)

# 통일 이후 통합방안:

##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